

박근혜의 앞날과
좌파의 과제

▶ 8~9면

복지 공약
벌써 시작된
뒤집기

▶ 4면

북아프리카
제국주의의
새로운 전선

▶ 7면

아베의 일본
평화헌법의
모순

▶ 6면

KTX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11, 16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인식
인쇄인_ (주)아아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21)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6499-279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설 연휴로 다음 호는 3주 뒤인 2월 18일에 발행됩니다.

Left21.com

제97호 | 2013년 1월 28일 ~ 2월 17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포트21

전두환 6억 꿀깍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박근혜가 또다시 ‘깜깜이’ 인사로 인수위원
장 김용준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박근혜는 김용준을 지명하면서 “법과 질서를 바로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 서 온 분”이라며 ‘법질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비리 측근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은 박근혜가 ‘법질서’ 운운하는 것은 역겹다. 박근혜가 당선하자 감옥 안에서 만세를 불렀을 한화 회장 김승연이 최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것은 ‘법질서’의 위선을 드러낸다. 불법파견을 하고도 ‘배째라’로 일관하는 현대차 회장 정몽구만 봐도 ‘법질서’가 진짜 노리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법질서’ 의제는 미국 레이건 정부나 영국 대처 정부 같은 강성 우파 정부가 즐겨 사용해 온 단골 메뉴

다. 한국에서도 독재정권들이 ‘정의 사회’, ‘범죄와의 전쟁’ 등을 들먹이며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급진좌파들을 숙죄양 삼아 탄압하곤 했다.

법관 시절에 “법과 질서를 바로세웠다”는 김용준도 전두환·노태우 처벌을 반대하며 ‘5·18 특별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고, 문익환 목사 등에 유죄를 선고하며 국가보안법을 옹호한 바 있다. 최근에는 “광우병 보도의 상당 부분이 허위였다”며 MBC <피디수첩> 제작진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엄청난 부자기도 한 김용준은 아들 두 명 모두 군면제자인데다, 이 아들들이 7~8살 때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드러나 편법 증여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자가 ‘사회적 약자’의 대표인 양 했던 게 우스울 뿐이다.

▶ 3면으로 이어짐

긴장만 높이는 위선적
대북 압박 중단하라



▶ 관련 기사 5면

리포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2차 가고 싶지 않으나. 솔직히 말해 바라. 그러려고 출세하고 돈 모으는 거 아니냐.”

이동흙이 후배 판사들에게 했다는 말

“사기꾼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공금으로 펀드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

이동흙 논란에 명진스님의 촌철살인

“군대생활을 잘해서 그런 거다. 자랑할 만한 거다.”

이동흙, 아들이 가수 비보다 더 많은 휴가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

“우리는 어제 ‘이동흙라빈스31’을 만들어 보기까지 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이동흙 청문회 준비 과정을 돌아보며

“최소 3차례 정도는 [유가족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마지막에 도의적으로나마 장례식 비용 정도는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에게 한 깨알 같은 아르바이트 학생 죽음 대처법

“[내가 1백51명 죽인 것을 안 믿으면] 국가 문란이나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을 도와주는 일”

KAL기 폭파범이라는 김현희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박원순 등이 종북이라는 전 KBS 아나운서 정미홍

“지금 노동운동권에는 죽은 사람을 열사로 영웅시하며 죽음을 투쟁 동력으로 삼으려는 ‘성전’의 문화가 존재한다.”

(조선일보) 사회부장 박정훈의 궤변

“대선 수개표 요구 집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는 북한의 ‘광명납작체’ 현수막이 등장해 충격을 줬다.”

북한 글씨체까지 알아보는 새누리당 심재철

“윤창중 효과 때문인지, 막말해야 정권에 중용된다고 한번 튀어 보려는 것 같다.”

한홍구 교수, 우익 막말꾼 증대 현상에 대해

“문재인을 지지한 48퍼센트는 공산화 세력”

‘유신 공주의 입으로 변신한 김지하

박근혜 시대에 더욱 날뛰려는 국정원과 ‘종북’ 마녀사냥꾼들

“제주 해적기지” 발언으로 해군참모총장에게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발됐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지윤 씨가 공안 탄압에 맞선 단결의 중요성을 말한다.

최근 국정원이 수원진보연대 고문인 이상호 씨를 몰래 미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정원은 ‘영장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 집행을 했다’고 우기지만 불법 미행과 몰래촬영까지 허가하는 영장이 있을 리가 없다. 오죽하면 국정원 직원이 실성한 사람인 척하며 빠져나가려 했겠는가.

뿐만 아니라 1월 17일에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내세워 대구경북민권연대 청년 활동가 2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5.6년 전에 청년단체에 가입한 일을 두고 갑자기 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서랍 속 메모와 사생활이 담긴 컴퓨터까지 복사해 증거로 가져갔다. 최근 교사들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한 부산 전교조 소속 교사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통합진보당을 향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김미희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6명 중 4명이 사법처리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얼마 전에는 인수위 기자실 해킹을 덮어놓고 ‘북한 소행’이라 우기고, 대선 수개표 요구 집회 현수막 글씨체가 북한 글씨체라며 수사 운운하는 일도 있었다. 이쯤되면 ‘물지마 종북론’ 수준이다.

최근 KBS 아나운서 출신 기업가 정미홍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도 종북이니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악선동을 해대고 있



최근의 내부 집음과 분열을 ‘종북’ 마녀사냥으로 돌파하려는 새누리당과 우파들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다. 서울 노원구청이 한홍구 교수 초빙 근현대사 강연을 주최하자 우파단체들은 ‘종북’ 교수 강연회라며 반대 집회까지 열었다. 얼마나 우파들이 ‘종북’ 딱지를 붙여대는지 새누리당 하태경이 “종북 개념을 너무 넓게 잡으면 진짜 종북을 잡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할 정도다.

물지마 종북론

이제까지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정치적 위기에 몰리거나 분열했을 때, 진보진영의 일부를 ‘종북’이라고 속죄양 삼아 공격해 왔다. 이를 통해 우파의 결집을 꾀하고 개악을 밀어붙이기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 했다. 박근혜 당선 이후,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격이 더 잦아지고 ‘종북’ 마녀사냥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최근 4대강 감사 결과, 이동흙 논란, 복지의 속도와 폭을 둘러싼 온갖 잡음 등 우파 내부에서 균열 양상이 드러나

왔다. 박근혜 취임 후 민영화와 경제 위기 고통전가 등을 추진하려는 새누리당에게 이런 조짐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1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쌍용차 국정조사 말바꾸기 비난 압력 등이 커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 심사를 꺼내든 이유도 뻔하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던 이명박 정부와 우파는 내 “제주 해적기지” 발언을 트집잡아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진보진영 분열과 우파 결집을 꾀했다. 그러나 이런 공격에 단호히 맞서면서 진보진영의 광범한 연대를 건설하려 애쓴 결과 얼마 전나는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우파들의 마녀사냥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진보진영을 위축시키고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진보진영은 단호하게, 단결해서 맞서야 한다.

강추위 속에 24시간 야외 근무한 노동자의 죽음

서울 서초구청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48세)가 돌연사했다.

이 노동자는 근래 체감 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 속에서 24시간 연속 야외 근무 등 고된 노동을 하다가 갑자기 숨을 거둔 것이다.

그는 왜 이 추운 겨울에 그런 처지로 내몰렸던가? 서초구청이 징계의 일환으로 야외근무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더 문제는 징계의 이유다.

지난 1월 2일, 이 노동자는 새누리당 진익철 구청장이 탄 관용차가 들어왔을 때 추위를 피해 초소에서 난로를 켜고 있다가 주차 안내를 빠르게 하지 못 했다.

이에 대한 징계로 구청 측은 난방기가 설치된 옥외 초소를 걸어 잠갔다. ‘구청장님이 들어오는데 감히 빠르게 나오지 않았다’는 과실죄가 적용된 것이다. 그래서 이 노동자는 기온이 27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한파 속에서 난방기도 없이 야외에서 견뎌야 했다.

노동자에게 구청장을 모시는 ‘질서’를 보여 주려 한 권위주의적 시도가 비극을 낳은 것이다. 사실 새누리당 정치인과 관료들의 이런 행태는 별로 새삼스럽지가 않다.

새누리당 이한구는 수십 일 동안 차가운 철탑에서 농성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을 찾아와 “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말만 늘어놓고 갔다. 살을 에는 추위 속에 칼바람을 맞으며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에게 박근혜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서초구청 노동자 돌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성지현

PHOTO

아직 끝나지 않은 용산의 외침
“여기 사람이 있어요”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4년이 흘렀지만, “화마에 불타고 갈에 찢겨진.. 시신을 부어잡고 하루하루를 생지옥에서 살아야 했던” 유가족들의 눈물은 오늘도 멈출 줄 모른다. 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철거민들은 당장 석방돼야 한다. 1월 20일 모란공원에서 열린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 추모제’

사진 이운선

신종 노조탄압법으로 둔갑한 DNA법

김우용 기아자동차 금속노회 중앙비대위 의장

1월 23일 수원지검에서 내 DNA를 채취해야 하니 검찰에 출석하라며 전화가 왔다. 너무나 황당했다. 이유를 묻자 2009년 기아차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폭력 관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니 DNA를 채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측의 고소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내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 후 3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내게 유리한 증인들이 거듭 나왔음에도 결국 사법부는 2012년 9월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죄 선고도 억울한데 이제 내 생체정보가

지 요구하는 것이다.

나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방어하기 위해 앞장서 싸워 온 노조 활동가이지 실험용 쥐나 흉악범이 아니다. 나는 연쇄살인범이나 성폭력 사범도 아니니 DNA 채취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고압적인 자세로 협박했다.

2010년에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DNA법)이 인권 침해 논란 속에서 제정됐다. 법 제정도 전에 쌍용차 점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용산 참사 관련된 철거민들이 강압적으로 DNA를 채취당했다.

DNA법 적용 대상은 광범위하다. 폭

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당하면 평생 유전자가 낱날이 밝혀져 국가 기관에 관리된다.

경기경찰청은 2010년 7월 법시행 이후 지금까지 5천1백 명의 유전자를 확보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이 절도범이다. 뺑 한 조각 훔쳐도 국가는 DNA를 가져가 평생 관리하고 통제한다. 빅 브라더가 따로 없다.

박근혜는 “법질서”를 강조한다. 솔한 비리를 저지른 자를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한 것만 봐도 법질서 운운은 위선이다. 사실, 흉악 범죄를 빌미로 경찰력과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진보진영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3년 전에 진보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DNA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에 제동이 걸리는가 싶더니, 박근혜가 당선하자 칼날을 노동운동 활동가들에게 겨누고 있는 것이다.

나는 DNA 채취 만행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순순히 응한다면 다음에는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협박할지도 모른다.

내가 속한 기아차지부과 금속노조, 민주노총을 포함해 진보 단체들이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검찰에서 DNA를 요구하는 전화가 온다면 거부하고 함께 대응하고 투쟁하자.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2월 18일 (월)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오후 7:00~8: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오후 6:45~8:4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오아시스빌딩 앞) 오후 7:00~8:00

2월 19일 (화)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오후 7:00~8: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오후 7:00~8: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오후 7:00~8:00
수원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앞 오후 7:00~8:00

2월 21일 (목)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오후 7:00~8:00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서울대입), 인사점(건국대입), 불무집(성균관대입),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부패한 위선자들이 활개칠 박근혜 시대

▶ 1면에서 계속

박근혜가 임명하거나 선호하는 인물들만 봐도, 박근혜 정부가 나아가려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합헌 의견과 ‘미네르바’ 처벌 합헌 의견을 낸 이동흡, ‘반(反)대한민국 세력’ 운운한 극우 인사 윤창중,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미화한 뉴라이트 계열 박효종 등이 그들이다.

또, 박근혜는 서순환, 장순흥, 안상훈처럼 박정희 독재 때 고위직을 맡은 자들의 자식들을 인수위로 끌어모아 “유신 2세” 인수위를 구성했다. 박근혜가 ‘박정희의 명예 회복’을 꿈꾸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극우 막달 대변인 윤창중은 온갖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의 신임을 얻고 있다. 반면 통일부 장관으로 예상되던 최대석은 ‘미스터리’한 과정을 거쳐 인수위에서 낙마했다. 상대적으로 대북 온건파인 최대석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등을 만나 대북 정책을 협의한 뒤 급작스럽게 물러나게 됐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도 강경한 대결 정책을 수정할 뜻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줬다.

박근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옮겨 약화시킨 것도 시사적이다. 그러면서 미국에 핵폐기물 재처리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핵개발까지 추구하며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군비경쟁에 뛰어들려는 의지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 기간 동안 박근혜의 공약 1호인 ‘경제민주화’는 언급조차 사라졌다. 대신 ‘또 다른 한강의 기적’ 등이 언급되며 경제 성장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주들에게 “손톱 밑 가시”를 빼 주겠다며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물론 최근 택시법 통과가 좌절된 것을 보면, 주로 재벌에 기반을 둔 박근혜가 중소기업주들을 만족시키는 일조차 쉽게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노동자들의 잇달은 죽음에 묵묵부답이다. 박근혜가 노동자들의 죽음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얘기가 새누리당에서 나왔지만, 지금 쌍용차에서 25번째 죽음을 바라는 고사라도 지낼 기세인 것은 바로 새누리당 이한구다. 더구나 이 추운 겨울에 1백일이 넘도록 철탑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

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히려 손배·가압류·가처분을 압박하는 것이, 박근혜가 “가슴 아파하는” 방식이다.

박근혜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차별, 노조 탄압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노동자들을 위해 준비한 것은 ‘법과 질서’라는 협박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박근혜의 노동정책이 “늘지오”(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올리고)가 아니라 ‘차취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피죄죄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만든 안종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이라며 의료민영화를 지지한 인요한, 핵발전을 옹호하고 전기요금 인상, 전력 민영화를 주장한 손완훈이 인수위에 들어간 것도 박근혜의 복지정책이 피죄죄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동흡라빈스31’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비리 의혹이 나온 이동흡이 헌법재판소장에 낙마한 것은 지배자들이 부패 문제를 두고서 분열할 가능성을 보여 줬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고소영·강부자 인사’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을 기억하는 새누리당에서조차 이동흡의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동흡 사례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나라 지배자들의 DNA에는 부패가 아로새겨져 있어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초기부터 윤창중, 장순흥, 인요한 등에게 부패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런 약점을 잘 보여 준다.

4대강, 특별사면 등을 두고 이명박과 갈등하기 시작하고,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박근혜의 복지정책을 두고 벌써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저들에게 불길할 것이다.

지배자들의 분열과 부패 추문으로 인한 도덕적 정당성 약화는 노동자들이 지배자들에 맞서 싸울 자신감을 키워 줄 수 있다.

갈수록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강동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질서를 더 강화할 박근혜 시대 인수위 앞에서 고 최강서 열사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동자.

‘이동흡’이 보여 준 ‘법과 질서’의 실체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전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이명박은 이동흡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이동흡은 집회·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친일과 부패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왔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으면서 법치를 한다고 떠들어대는 아비한 지배자들에게나 ‘적임자’였을 뿐이다.

게다가 까도까도 끝없는 온갖 부정과 의혹들을 보면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것인지 잘 보여 준다.

이동흡 지명은 이명박이 했지만 박근혜와 혐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 첫 인사’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비리 백화점 인사로 얼룩진 것이다.

경멸

청문회를 본 법조인들도 부끄럽다며 현재의 위상과 권위의 추락을 걱정한다. 가뜰이나 먹고살기 어려운 서민들은 저런 자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됐고 소장으로까지 지명되는지 의심을 품고 경멸하고 있다.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옹호하는 새누리당을 보며 ‘살인·강간은 해야 결정적 하자인가 보다’ 하는 비아냥도 나왔다. ‘법과 원칙’ 운운하며 이런 자를 지명한 것은 결국 저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대중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정권의 주구가 필요할 뿐임을 보여 줬다.

내가 속한 공무원노조도 이런 자들의 실체와 부패를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

오바마 취임 연설의 위선

‘나에게는 전쟁의 꿈이 있습니까?’

버락 오바마는 1월 21일 취임 연설에서 “오랜 전쟁이 끝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 몇 시간 전, 미국 무인전투기가 예멘을 폭격해 두 사람을 죽였다.

미국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무인전투기 공격만 4백47건에 달한다.

미 당국은 상세한 정밀 타격 작전규범 작성을 거의 끝냈다고 주장했다.

속 편하게도, 그 작전규범은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작전규범은 정밀 타격, 다시 말해 암살을 정당화하는 데 쓰일 것이다. 또한 이는 교전지역 바깥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시 정권하에서는 살인과 고문이 명문화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오바마 정권의 정책은 살해하고 고문하는 것을

교본으로 공식화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CIA 요원이 고소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오바마는 ‘마틴 루터 킹의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했다.

이보다 더 극명한 위선은 없을 것이다. 1967년 킹 목사는 “컴퓨터로 자행되는 파괴”가 베트남전에서 “당대 최고의 폭력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비난했다.

킹 목사가 제시한 대안은 “지금이 혁명적 시기”임을 인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구 전체에서 인류는 착취와 억압의 구체제에 맞서 봉기하고 있다. 노쇠한 세계를 자궁삼아 정의와 평등의 새 체제가 태어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37호 / 번역 김인수



아프가니스탄에서 연설하는 오바마.

폴라주 89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대한민국 지배계급의 실천력



illusion

뺏어 걸린 박근혜 복지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장호중

취임식도 하기 전에 박근혜에게 복지 공약을 내팽개치라는 우파의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새누리당 의원 정몽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약을 다 지키고 퇴임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나성린은 “전 어르신에게, 즉시 주겠다”(11월 5일, 박근혜)고 한 기초연금도 “올해부터 20만 원 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 하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조선일보〉윤영신은 “우리에게 아직 내뱉힐 줄 아는 DNA가 남아 있다[다] … 국민은 씬쌔이를 줄이고 고통을 감내하며 미래를 헤쳐갈 준비가 돼 있다” 하며 복지는커녕 아예 내뱉 정책을 주문했다.

복지 확대가 도덕적 해이를 낳을 것이라는 기획 기사도 부쩍 늘었다.

이런 압박에 박근혜는 일단 입막음만 하는 듯하다.

“대선 때 공약한 것을 지금 와서 ‘된다,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런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할 일[이다.]”

박근혜의 복지 공약에 사기성이 짙다는 것은 선거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박근혜는 모든 공약을 시행하는 데에 5년 동안 1백35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실제 필요한 예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물가인상을 같은 기본적인 수치도 반영하지 않고 억지로 꿰어 맞춘 것이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세 가지 공약(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생활보장 확대)을 시행하는 데에만 앞으로 4년 동안 77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무상보육 · 일자리확대 · 장애인지원 · 노인복지 등 7대 복지 대선 공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따져 보니 2017년까지 4년간 매년 평균 26조 4천억 원 등 모두 1백5조 원이 더 들 것으로 추계됐다.”

재원 마련 계획도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71조 원, 세제 개편으로 48조 원, 복지행정 개혁으로 10조 6천억 원 하는 식이었다.

〈조선일보〉조차 “현실을 몰라서 우기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그나마 올해 예산에 반영한 건 고작 2조 4천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의 엉터리 셈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1퍼센트에 기반을 둔 박근혜가 복지를 크게 늘리겠다고 한 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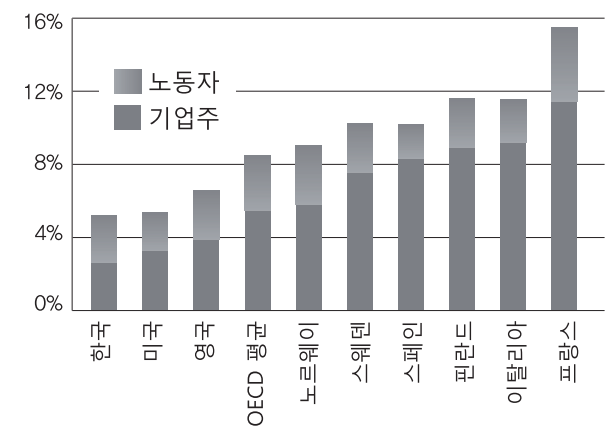
그러려면 큰 돈이 들텐데 문제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국제발행은 저들이 백하기 힘들다. 국제발행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국가 신용 등급 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지배자들의 우려다.

증세는 재벌과 부자들이 질색한다. 박근혜도 “지급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율을 인상해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박근혜는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 증세라는 ‘트릴레마’(딜레마 —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 를 세 가지 선택에 빗대 만든



희망을 절망으로 바꿀 박근혜의 복지 사기극이 시작되는가.



OECD 국가에서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각종 보험료) 비율
한국 기업주들이 내는 보험료는 평균보다 30조 원가량 적다.

말)에 빠져 있다.

박근혜에게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다. 첫째, 우파들의 주문대로 공약을 폐기 수준으로 후퇴하거나 말을 바꾸는 것이다.

트릴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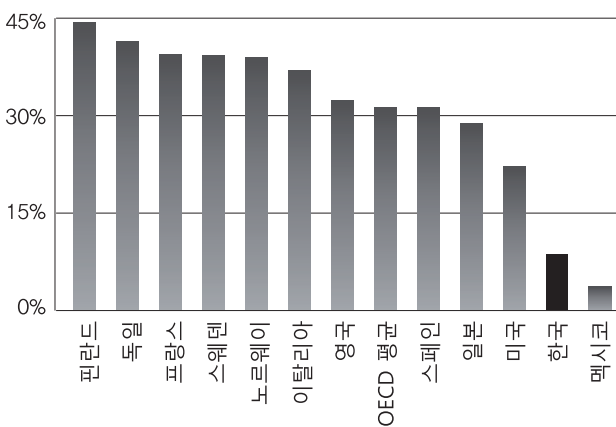
‘4대 중증질환 1백 퍼센트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대표적이다.

대선 TV 토론 당시 문재인은 “왜 심장은 되고 간은 안 되냐?” 하고 이 공약의 한계를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간병비나 4인실 이상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나아지는 게 거의 없다.

둘째, 복지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렇게 자본가들의 부담을 더는 한편 복지 확대로 생겨나는 효과는 자본가들이 가져가게 할 수 있다.

예컨대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면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자본가들의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조세와 복지의 불평등 개선율(지니계수 감소 비율)
한국의 조세·복지 제도는 재분배 효과가 매우 낮다.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담배 · 술 등에 붙는 징벌적 세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조처는 일시적인 복지 재원 마련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노동자 전체에게는 생활 수준을 낮추는 일종의 내뱉 정책이다.

이렇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생색내기 수준으로 복지를 늘리는 것은 자본가들도 굳이 꺼릴 이유가 없다.

사실 자본가들도 어느 정도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단순히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을 넘어서

노동력의 질을 높이고(교육), 의욕을 끌어올리고(연금), 건강하게 유지하는(의료) 데에도 투자해야 한다. 한국 자본가들에게는 출산율을 끌어올려야(보육) 하는 시급한 과제도 있다. 다만 자본가들은 서로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유럽 복지국가에서도 강력한 국가 권력이 이런 반발을 위에서 누르거나,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불만과 행동이 자본가들의 양보를 이끌어 낼 때에야 복지가 도입되곤 했다.

그럼 때조차 복지 비용을 노동자들이 부담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 결과 20세기 후반에 유럽의 주요 복지국가에서 노동자들이 받은 복지 총액이 노동자들의 세금 총액과 같았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복지국가가 ‘계급 내 재분배’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 점에서 진보 진영 내 일부에서 ‘보편적 증세’론을 펴는 것은 우려스럽다.

이미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복지 비용(보험료)이 지나치게 큰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자칫 박근혜의 고통 전가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보편적 증세론은 노동자들을 이간질시켜 각개격파하려는 박근혜의 계획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게 투표한 수백만 명의 하층 중간계급과 일부 미조직 노동자들은 불만을 느낄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과 맞물려 그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의 추락은 시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사실 복지를 대폭 확대할 돈이 없다는 우파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기업주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늘려도 매년 약 30조 원의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감사원조차 총체적 부실로 인정한 4대강 사업 등 건설사들의 배만 불러주던 각종 토목 예산과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군비 지출도 줄여야 한다. 투자되지 않고 쌓여있는 기업과 부자들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면 박근혜가 약속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복지를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지적한 것처럼 진보 진영은 “부자와 대기업의 증세에 눈돌려야 한다. 재원확충이 어렵다고 축소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진보 진영은 박근혜의 복지 후퇴를 폭로해 노동자들의 사기를 고무하는 한편 노동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부자 증세와 복지 확대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①

기초노령연금 – 두 배로 늘린다고 약속한 적 없다?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개악 논의는 박근혜 복지의 앞날을 잘 보여 준다.

한 달에 10만 원이 채 안 되는 용돈 연금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더니 벌써 말이 바뀌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나성린은 아예 ‘그런 공약 한 적 없다’고 나오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2028년까지 국민연금 급여율을 3분의 1이나 삭감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40년 뒤에 재정이 고갈된다는 ‘예측’에 따라 수백조 원의 기금을 쌓아두고도 노동자들의 미래를 잔인하게 빼앗았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도 같이 삭감됐다.

이때 노동자들의 광범한 불만을 억누

르려고 도입한 것이 기초노령연금이었다. 한편에서는 삭감된 국민연금만큼 조삼모사식으로 보충해주겠다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 당장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노인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퍼센트로 시작한 기초노령연금을 10퍼센트까지 늘리고 지급대상도 전체 인구로 확대하는 계획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그 뒤 5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사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은 진작 지켰어야 할 약속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해 내건 이 묶은 약속을 이용해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을 삭감하려는 듯 하다.

2007년 연금 삭감의 대가로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을 공무원과 교사, 군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논의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일부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는 2007년에 이어서 연금을 한차례 더 삭감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러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가장 많이 받는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용돈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연금이 부실해지면 노인 빈곤은 더욱 심화할 것이고, 폐지쯤은 할머니와 거울에 냉방에서 얼어죽는 할아버지의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

다른 한편 국민연금 기금에서 돈을 가져다 쓰겠다는 박근혜의 계획은 결국 기

초연금 재정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전액 국가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그 일부를 노동자들의 보험료로 만들어진 국민연금 기금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고갈된다더니!

현재 소득 하위 70퍼센트의 65살 이상 노인에게 9만 4천6백 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그 두배로 지급하는 데에는 9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

지배자들은 체제의 이윤을 위해 피땀을 바친 늙은 노동자들에게 이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고 있다. 언론의 실시간 중계 속에 걸그룹을 불러서 호화 생일파티를 하는 이진희와 같은 자들에게 세금을 건어서 노동자들의 인간답고 품위있는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긴장만 높이는 위선적 제재를 중단하라

김영익

1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위성운반체 발사를 두고 결의안까지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2087호)는 로켓 개발에 관련된 기업과 개인 들을 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의 모든 금융 활동을 감시 대상으로 정하고 선박 검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즉, 기존 대북 금수 품목이 아니라도, 개별 국가들이 북한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품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트리거 조항’도 한층 강화됐다.

이번 결의를 근거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추가 제재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

북한 당국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

지 않는다”며 사실상 3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예고했다.

이로써 강대국들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반발을 부르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불안정이 더한층 높아지게 됐다. 당장 2월에 한반도에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대응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크게 고조될 듯하다.

물론 북한의 로켓과 핵 개발은 진정한 사회주의와 무관할 뿐 아니라, 반제국주의 운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핵실험

그러나 제재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며, **안보리 국가들은 북한을 제재할 자격도 없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우주를 전세 낸 것처럼 행동한다. **자신들은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할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를 환영한 박근혜도 최근 미국에게 핵무기 제조의 기반이 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근본 원인도 아니다. 동아시아 바다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일삼는 군사훈련,

은 생각과 모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체화한 인물로 알려진 최대석이 갑자기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게 “대북 관계를 둘러싼 인수위 내부 노선 다툼”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다.

대선에서 박근혜가 승리한 직후 국방부는 처음으로 국방백서에 NLL(북방한계선)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명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을 앞둔 1월 16일에 미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스스로 “북핵 개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박근혜도 앞으로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대북 정책에서도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이

일본 자위대의 대중국 전진 배치와 전력 증강, 중국의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이 더 큰 문제다.

진정한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면서 이를 핑계로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로켓 능력을 과장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결속시키고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명분으로 삼아 왔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 당국의 반발을 불러 왔던 것이다.

남한의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오바마 2기 정권이 북미 관계에서 1기 때의 “악의적 무시”와 다른 접근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 결의는 오바마 2기 정권의 대북 정책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 줬다.

오바마 정권이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한, 북한 위협론은 대중국 포위의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대북 제재는 더한층의 호전적 조치들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오바마는 이번 기회도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전략의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이용할 것이다. 이미 국방장관 리언 파네타는 퇴임을 앞두고도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을 빌미로 “동맹국들, 특히 일본 및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 MD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은 동아시아에서 긴장과 불안정을 낳는 핵심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미국과 남한 정부의 과장과 위선을 폭로하고, 이들의 위선적인 대북 제재를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야말로 동아시아 불안정을 높이는 원인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박근혜 차기 정권의 친제국주의 정책과 군비 증강을 저지하는 운동을 건설할 과제가 놓여 있다. 따라서 지금 노동계급 정치조직들이 반제국주의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단결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위험한 실체를 드러내는 박근혜 대북 정책

이번 제재 결의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체도 보여 줬다. 박근혜는 대선 기간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 관계 신뢰 증진, 북한 비핵화 진전, 대규모 경제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안보 강화”를 위해 군비를 계속 증강하겠다는 박근혜와 우파들의 뿌리 깊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②

누더기가 될 반값 등록금 약속

박근혜의 등록금 정책은 이명박 정부 말기 등록금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명박은 반값 등록금 약속 이행 요구에 대해,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대응했다.

물론 쥐꼬리만 한 장학금 혜택이라도 없던 것이 새로 생기면서 대학생들이 다소 기대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지급되던 장학금은 삭감돼, 정작 장학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 중 일부는 오히려 장학금이 줄어들기도 했다.

심지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학점 제한이 있어 대략 90만 명 이상이 장학 혜택에서 원천 배제됐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들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학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장학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곤 한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평가에 기초해 차등지급했는데, 이는 대학 간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했다. 어떤 대학의 학생에게든 고작 1만 원 장학금이 지급되기도 했고, 심지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돼 2유형 장학금을 못 받은 곳도 있다. 특히, 등록금 인하율이 낮

아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학생들은 등록금이 비싼 이유로 오히려 장학 혜택도 줄어드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물론 박근혜는 불만을 무마하고자 당장에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늘렸다. 올해 예산안에 책정된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59퍼센트(약 1조 원) 늘어 총 2조 7천7백50억 원이다. 1년 등록금 부담이 총 14조 원이므로 국가장학금으로 20퍼센트 가량의 부담을 경감하는 규모다. 그리고 박근혜는 향후 국가장학금을 1조 원가량 더 늘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이 못 된다. 박근혜는 나머지 금액은 사립대학들의 ‘자율적 노력’에 맡기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에게 맡겨 두는 것은 교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있는 사립대학 재단들이 지난해처럼 등록금 인하를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벌써 올해 상당수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는 방향으로 후퇴하

고 있다.

그리고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복지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

그래서 한편에선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정원 감축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 한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국가장학금을 늘리는 현재 추세마저 역전될 수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약속은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학생 활동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등록금 정책의 모순을 폭로하면서, 정부를 상대로는 국가장학금을 더 늘리고 국가장학금 성적 제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립대처럼 국공립대부터 고지서 상 등록금이 반값이 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등록금을 절감 인하하거나 인하를 거부하거나 사립대학들에서는 등록금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투쟁을 건설하려 해야 하고, 그것을 대정부 투쟁으로도 연결시켜야 한다.

정병호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③

구멍이 숭숭 뚫린 무상보육

박근혜의 보육정책은 시설을 이용하는 0~5세의 모든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걸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가정 양육하는 0~2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소득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있어서 완전한 무상보육이라 할 수 없다.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을 유도해 국가가 적은 비용만 들이고 영유아 보육을 개별 가정에 떠넘기고 보육수요를 억제하는 효과적 인 수단이다. 또한 영유아에게 주양육자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엄마여야 한다는 것은 여성차별이다.

대다수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시설을 선호한다. 하지만 박근혜의 보육정책은 국공립시설 확충에 소극적이다. 인수위는 1년에 국공립시설 50개소 신축, 기존 시설 1백 개소 국공립 전환,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국공립시설은 아동수 대비 9.7퍼센트로 매우 부족하다. 지난해 말 ‘유치원 대란’도 국공립시설 부족으로 생긴 사태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국공립시설을 대폭 확충하지 않고 민간시설인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이는 민간시설 원장들의 이해관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것 때문이다.

‘무상보육’ 이후에도 돈벌이에 급급한 원장들

때문에 맞벌이가정이 피해를 보고 있다.

민간 시설 원장들은 장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가정의 아이를 기피하고,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시간 연장 운영을 취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맞벌이가정은 추가 보육료 부담이 커졌고 여성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명확한 규제가 없는 특별활동비는 원장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 국고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착복하기 위해 횡령, 비리, 아동 학대와 보육노동자 인권유린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민간 시설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육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됐을 때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양육수당보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으로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무상보육을 계속 유지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부자증세와 같은 조세개혁이 없다면 박근혜 또한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무상보육’마저 후퇴시킬 것이다.

부모와 보육노동자, 진보진영은 진정한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자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정미순

(참보육 실현을 위한 전국 부모연합 운영위원장)

아베의 일본은 어디로 ①

평화헌법 형성과 함께 뿌려진 재앙의 씨앗

최근 동중국해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전투기가 접근하고, 이에 대해 일본 자위대가 “경고 사격”을 공언하는 등 동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재무장과 우경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두 차례의 연재를 통해 1) 평화헌법이 형성된 배경과 모순 2)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해 살펴본다.

아베와 일본 우익들이 개정하려는 헌법은 1946년, 제2차세계대전 직후 미군에 의해 제정된 이른바 ‘평화’헌법이다. 이 헌법 9조에 따르면 일본은 전쟁을 벌일 수도, 이를 위해 전력을 가질 수도 없다.

그런데 모순이게도 “현행 헌법의 ‘무장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자위대와 주일미군이라는 실질적 전력과 무장이 존재한다. 자위대와 현행 헌법이 기묘하게 ‘동거’하고 있는 것”이다.(성공회대 권혁태 교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를 설명하려면 이 헌법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됐고, 그 모순은 무엇인지를 살펴 봐야 한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점령하게 된 미국은 일본을 자신의 풀마니로 삼고자 했다.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일본에 온 맥아더는 이를 위해 천황제를 그대로 두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이런 방식은 미국에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은 해방된 조선에서도 친일 세력을, 독일에서는 나치를 적극 활용했다.

그래서 “맥아더는 천황의 측근까지도 진지하게 제기한 퇴위 문제를 비밀리에 기각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지도자는 다름 아닌 천황이라는 공공연한 찬사를 늘어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것은 “맥아더 장군과 측근들이 천황의 전쟁 책임,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잔혹한 전쟁이 치러지는 것을 수수방관한 도덕적 책임까지도 면제해 주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존 다우어, 《패배를 꺾안고》)

전범으로 기소될 처지였던 일왕은 기꺼이 미국의 점령 정책을 도울 태세가 되었다.

그런데, “천황제 중심의 국가체제를 회복하려면 불과 얼마 전까지 천황의 이름으로 움직인 군대 때문에 고통받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일본이 다시는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보장해 주는 일이 필수적이었다. 그리하여 [새 헌법의] 천황과 관련된 1조부터 8조까지의 조항에는 국가적 평화주의 선언인 9조가 필요했다.”(개번 매크맥, 《종속국가 일본》)

즉, 헌법 9조는 주변국을 안심시켜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였다.

이렇듯 ‘평화’헌법은 전범인 일왕을 “일본의 상징”으로 규정해 놓음과 동



사진 출처 Daniel Ewer (블리커)

주일미군 헌법 9조는 주일미군이라는 거대한 군사력이 일본을 지켜줬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다.

시에 ‘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었다. 개번 매크맥 교수의 지적처럼, 이 헌법은 “매끈한 일체가 아니라 서로 연관된 한 묶음의 모순들을 한데 합쳐 놓은 것”이었다.

미국과 일본 지배자들 모두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도 9조의 ‘평화’ 조항을 고치고 싶어 했다. 이것은 전후 냉전체제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1945~46년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일본을 단지 미국에 순종하는 작은 나라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국민당 장제스가 패색이 짙어지자 아시아에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 1949년 소련의 핵실험 성공은 미국을 더 다급하게 만들었다. 일본은 중국을 대신해 미국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핵심 동맹이자 병참기지로서의 구실을 담당해야 했다.

미국은 점령 정책의 방향을 “강력한 일본 정부를 육성”하는 것으로 전환했다(이른바 ‘역코스 전략’). 미국은 일본을 “극동의 공장”으로 재건하려고 힘을 쏟고, 신속히 무장시키기 시작했다.

“점령군이 추진해 온 재벌해체·경제집중 배제·배상징수와 노동기본법의 용인 등의 비군사화, 민주화 정책은 중지되고 경제부흥·배상중지·경찰력의 강화·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정의권의 부인 등 반공의 방파제로써 일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 것이다.”(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동아시아 근현대사》)

한국전쟁 중에도 일본은 미국의 후방 병참기지 구실을 했다. 이것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요충지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한층 부각시켰다.

미국은 일본에 (장차 자위대로 발전할) 경찰예비대 창설을 요구하며 무장을 촉구했다. 전쟁 책임자들은 대거 사면됐다. 아베 신조의 외조부인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도 이때 수혜를 받았다. 구일본군 장교들이 경찰예비대에 다시 들어가게 됐다.

미일 안보 동맹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대일강화조약)이 일본에게 비교적 관대한 내용으로 채워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일본 지배자들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한껏 편승했다.

이렇듯, 헌법 9조는 처음부터 모순을 품고 있었고, 미국의 ‘역코스 전략’에 따라 그 모순은 더 커졌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모순은 주일미군의 존재였다. 1951년 미국은 미일안보조약을 통해 일본에 계속 주둔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지배자들은 ‘주일미군은 헌법이 금지한 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주일미군의 존재를 정당화했다.

특히 미국은 1972년까지 오키나와를

직접 지배하면서 이곳을 주일미군의 집결지로 바꿔 놔다.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이 겪은 엄청난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지배자들은 일찌감치 헌법 9조를 없애 헌법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일본의 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시도에 거세게 반발했다. “정복자[미군]의 명령이라는 그리 유망하지 않은 기원에서 출발했을망정 지금까지 그것을 개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그래서 20세기까지 실제로 이를 밀어붙인 총리는 없었다. 이들은 그것을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여겼다. 일본 지배자들은 대개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경제 성장에 주력하는 편을 택했다.

그래서 성공회대 권혁태 교수는 일본의 “평화주의가 특수한 조건하에서 작동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일미군이라는 거대한 군사력이 일본을 지켜 줬기 때문에 헌법 9조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냉전이 동안 경제 성장을 거듭하며 일본 지배자들은 점점 더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과 위상을 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모순과 위험을 더 격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이 점을 다음에 살펴볼 것이다.

이현주

시리아

아사드는 갈수록 공지에 몰릴 것이다

2010년 3월 15일부터 본격화한 시리아 민중의 저항이 22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목숨을 잃은 사람만 6만 명이 넘는다. 레바논, 요르단, 터키로 피신한 최소 60만 명(유엔 집계)의 난민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왜 시리아는 3~4주 만에 독재자를 무너뜨린 이집트, 튀니지와 다르게 전개됐는가?

최근 <한겨레>는 한 기사에서, 시리아가 이집트와 달리 제국주의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시리아 지배자들은 이집트 등의 지배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과 태도를 취해 왔다. 무바라크가 30년 동안 대규모 사유화를 단행하고 각종 보조금을 폐지하며

양극화를 키웠듯이 아사드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2000년에 집권한 아사드는 사유화와 시장 개방을 단행하고, 각종 보조금과 가격 통제 정책을 없앴다. 그 결과 실업률이 치솟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이런 공통점 때문에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혁명이 벌어지자 시리아에서도 저항이 시작됐다.

두 나라의 대외정책도 본질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집트와 시리아는 둘 다 1990년대 초 걸프전에서 군대를 보내 미국을 지원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2000년대에는 두 나라 모두 CIA가 ‘테러범’을 체포·고문하는 데 협력했다. 다만 이집트가 협조의 대가로 미국한테 크게 보상받은 반면, 시리아는 위와 같은 은밀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미국

한테 인정받지 못했다.

이집트에서 혁명이 좀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던 이유는 노동계급의 조직과 힘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운동

2000년 팔레스타인의 저항운동(2차 인티파다)은 이집트의 민주화 운동을 자극했고, 이는 다시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2006년 마할라 섬유 노동자들의 파업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며 이집트 노동운동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2007년에는 임금을 3백25퍼센트나 끌어올린 파업에 힘입어, 민주노조(‘독립노조’)가 결성됐다. 그리고 무바라크 퇴진 운동이 한창이던 2011년 2월 초 수에즈운하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곳곳으로 파업이 확산됐고 사흘 만에 무바라크는

사임했다.

그러나 시리아에서는 혁명 발발 후 대도시에서 노동자 파업이 벌어지기까지 5개월이 걸렸다.

시리아에는 3백만에 이르는 노동자가 있고 대부분이 6대 도시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1980년대 초에 하마 학살(2만 명 사망) 등으로 궤멸적 타격을 입은 이후 아직 충분히 힘을 회복하지 못해 왔다.

아사드 정부는 뒤로는 미국에 협조하면서도 겉으로는 반미·반이스라엘을 표방하며 국내 저항세력 탄압을 정당화했다. 계급 분단선을 밝히는 노동운동이 약했던 까닭에 아사드는 종파 간 분열도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이집트에서 군부 등 지배계급의 일부가 무바라크에 등을 돌렸지만 시리아

에서는 주요 자본가들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것도 아사드 정부가 오래 버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개입도 혁명을 뒤틀리게 하는 구실만 하고 있다. 아사드는 이것을 이용해 자신이 마치 반제국주의를 위해 버티는 양 포장하고 있다.

그 결과, 아사드 일가와 거의 일체화돼 있는 시리아 군부는 쉽게 분열하진 않고 있다.

이처럼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됐지만 시리아 민중은 종파 간 갈등으로 빠져들지 않고, 서방의 개입을 거부하면서도 정부군을 무너뜨리고 있다. 도시 노동계급의 투쟁도 서서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경이로움 속에서 어떤 대안 세력이 창출될지 주목해야 한다.

김종환

알제리 가스전 참사

서방 제국주의가 만들어 냈다

켄 올렌데

서방은 알제리 가스전 시설 참사를 자신들이 한때 식민지로 삼았던 곳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싶어 한다

서방 열강은 알제리에서 벌어진 인질극을 왜 자신들이 이슬람주의 조직 알카에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서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데 이용하려 한다.

알카에다 마그레브[서북부 아프리카] 지부(AQIM)가 수백 명을 인질로 잡은 인아메나스 가스전 시설 공격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혔다. AQIM은 이슬람주의 정치범 석방과 말리에서 프랑스가 철군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는 이 사건이 프랑스의 말리 개입이 정당함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알카에다와 서방이 마그레브 지역에서 하는 구실을 둘러싼 거짓 신화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많은 지하드 참가자들이 스스로 알카에다를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상호 협력 관계를 보여 주는 명확한 증거는 대개 찾을 수 없다”고 옳게 지적했다.

알제리 특수부대의 작전으로 외국인 노동자 약 1백 명과 알제리인 7백 명이 풀려났다. 이 시설은 영국 석유기업 BP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30명 이상의 인질범과 약 60명의 노동자가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가스전 개발 회사는 2천5백만 파운드(4백2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향후 얻게 될 막대한 잠재적 이익 때문에 그들은 알제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그러나 현지 지배자들과 제국주의 열강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이번 알제리 폭력 사태는 아만으로 점철된 알제리 역사가 낳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식민지배

제2차세계대전 후 프랑스 지배자들이 식민 지배를 고수하고자 전쟁을 벌인 탓에 1백만 명이상이 죽었다.

1990년대에는 온건 이슬람주의 단체들의 연합인 이슬람구국전선(ISF)이 총선에서 승리하자 당국이 그 선거를 무효화해 버렸다. 이 일로 인해 내전이 벌어져 20만 명이 사망했다.

ISF는 1991년 시작된 걸프전에 반대하면서 지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또한 경제 문제를 놓고서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고 총파업을 조직하기도 했다.

알제리 정부는 이슬람주의자들을 꺾었지만 엄청난 오명을 안아야 했다. 그 후 알제리 정부는 미국에 접근해 재무장에 대한 지원과 국제

아프리카와 프랑스 제국주의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

9·11 이후 조지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에 새로운 동맹들을 기꺼이 끌어들이었다. 특히 이슬람주의를 진압한 전력이 화려한 알제리가 참여한 것에 대한 기쁨이 컸다.

그러나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학 연구대학(SOAS)의 제러미 키넨은 정부가 주장하는 공식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키넨은 AQIM과 알제리 정부부(DRS)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인아메나스 공격과 같은 일은 국가의 도움 없이는 벌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장교인 존 선들러도 DRS가 내전 기간에 수많은 이슬람주의 단체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선들러는 “그러한 단체들 지도부의 상당수가 DRS 요원이고, 그들은 조직원들을 대량 학살로 내몰거나, 거의 모든 알제리 사람들이 이슬람주의에 완전히 등을 돌리도록 만든 잔인한 전술들을 구사하게 하곤 했다”고 말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37호 / 번역 정중수

프랑스 제국주의의 말리 ‘재정복’ 시도

프랑스 군부가 말리 개입의 수준을 높였다. 폭격으로 이슬람주의 세력을 막지 못하자 지상군 2천 명가량을 투입한 것이다.

프랑스는 이 지역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

프랑스는 자국 핵발전소에 필요한 우라늄의 상당 부분을 말리에 인접한 니제르에서 얻고 있다. 말리 북부에서 대규모 우라늄 매장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프랑스 국방장관 장이브 르 드리앙은 자신들이 말리를 “전면 재정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영국 언론은 영국군도 투입에 대비해 경계경보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는 파병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병참·수송 물자를 증강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부차적으로 이런 무력시위는 군부가 군사력 삭감 압력에 저항하려고 벌이는 듯하다. 프랑스와 영국은 북아프리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위협을 과장해 왔다. 영국 총리 카메론은 이슬람주의 반군이 유럽의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과장

미국은 이 지역 정부들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럼에도, 아니 어쩌면 그 때문에, 미국은 이런 종류의 허풍에 장단을 맞추는 필요를 덜 느낀다. 말리 사태가 미국에 위협이냐는 질문에 미 국방장관 파네타는 “아마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결코 미국이 군사개입이라는 폭력적 선택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미국 무인전투기들은 1월 19일 예멘에서 최소한 8명을 살해했다.

이 지역의 아프리카 정부들도 말리에 군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더 많은 서방과 아프리카 나라들의 군사 개입은 위기를 더 확산시킬 뿐이다. 1월 19일에는 도로변 폭탄 때문에 말리로 향하던 나이지리아 병사 2명이 사망했다.

말리 북부 반군은 투아레그 족의 일부다. 3백만 명에 달하는 투아레그 족이 말리, 니제르, 알제리, 리비아 등에 흩어져 있다. 말리에는 80만 명이 살고 있고 그들은 말리 독립 이후 5번에 걸친 반란을 일으켰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37호 / 번역 김중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아프리카를 지옥으로 몰아가는 서방 열강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서방 열강들의 아프리카 개입을 다룬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서방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말리 개입과 알제리의 인질극은 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이 전선이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사태를 이해하려면, 아프리카 전역이 서방 제국주의 열강한테 중요한 곳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핵심적으로 아프리카의 천연자원 개발 열풍, 특히 아프리카의 땅과 바다에 매장된 석유·천연가스가 점점 더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인질 사태가 벌어진 알제리 사막의 인아메나스 가스전은 오랫동안 서방이 개발에 참여했고 서유럽 천연가스 사용량의 2퍼센트를 공급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남아프리카의 빈국 모잠비크에서도 석탄과 천연가스 채굴권을 둘러싸고 다국적 기업들이 쟁투를 벌이고 있다.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에 개입해야 할 이해가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옛 아프리카 식민지들에 군사적 개입을 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영국이 르완다 투치 족 정권의 후원자가 됐다. 비록 최근에는 르완다 정부가 천연자원이 풍부한 이웃나라 콩고를 불안정하게 하려고 너무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거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가져 본 역사가 없는 미국도 최근 들어 아프리카에서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아프리카사령부를 설치하고 바빠 움직이고 있다.

서방이 비호하는 부도덕한 정권이 르완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언론은 알제리 특수부대의 “터프함”을 찬탄하는 보도를 많이도 했는데, 이들은 20만 명이 사망한 1990년대의 아반적인 내전에서 그런 “터프함”을 연마한 부대다. 이 내전은 알제리 군부가 총선에서 온건 이슬람주의 정당이 승리한 것에 불복하면서 촉발됐다.

서방 첩보기관

2003년에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자, 영국 비밀정보부(MI6) 같은 서방의 첩보기관들은 카다피가 이슬람주의에 맞선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카다피를 타도한 전쟁의 결과로 중무장한 이슬람주의 투사들이 리비아에서 마그레브 전역으로 퍼져 나가면서, 이 지역의 불안정이 심해졌다.

프랑스가 이슬람주의 민병대와 투아레그 유목민 반군 연합에 맞서 말리 북부에 개입한 것은 또 다른 불안정 요소다. 〈인디펜던트〉 중동 특파원 패트릭 콕번은 다음과 같이 썼다.

“알제리, 리비아, 니제르, 부룬디나파소 모두에 가난한 소수민족인 투아레그 족이 살고 있다. 이 나라 정부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위협이 주요 관심사인 양 말하는데, 이러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정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역사를 살펴보면, 북아프리카 지역의 진정한 고민거리는 투아레그 족의 분리주의다. 투아레그 족이 가난하긴 하지만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희귀 자원이 매장된 지역에 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콕번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말리 정부가 마그레브 지역의 알카에다로 하여금 말리 북부에서 투아레그 족 분리주의자들의 대항마로 활동하도록 부추겨 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의 어설픈 개입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미군 특수부대는 마그레브와 서아프리카 전역에서 군사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난 4년 동안 5천5백억 원에서 6천3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썼다. 말리는 이 프로그램의 “모범적 파트너”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해 말리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말리 북부에서 교전 중이던 4개의 정예부대 중 3개 부대의 투아레그 족 사령관들이 그들의 병력을 반군에 넘겼다. 아프리카사령부의 수장 카터 F 험 장군은 이 사태에 당황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훈련시킨 군대가 선출된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는 데 참여했다는 사실에 깊이 실망했다.”

사태가 이러하니, 알제리의 인질극과 말리에서 진행되는 프랑스의 군사 작전의 배후에는 훨씬 더 복잡한 정치·경제적 관계들이 존재한다. 현지 정부들은 권력을 유지하려 책략을 부리고, 서방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는 이 지역에서 위상을 강화하려 한다. 아프리카인 대부분이 가난하다는 사실 또한 염두에 둔다면, 더 많은 폭발적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37호
번역 김인수

박근혜 정부의 앞날과 선명 진보 언론에 거는 기대

최일봉 노동자연대총괄 운영위원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공직 선거의 효과를 과소평가한다.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별 상관없다는 식이다. 선전을 위한 자선들이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선거 허무주의라고 할 만한 태도를 취하기 일쑤다.

하지만 선거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거대한 계급투쟁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웬만한 계급투쟁보다는 흔히 더 중요하다. 특히, 한국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고 권위주의 정치 체제의 잔재와 유산이 비교적 강력하게 남아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박근혜 정권의 등장이 노동계급 운동에 미칠 첫째 악영향은 국가 기구들을 통제하는 자라들이 좀더 강성 우파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취임 초기에는 ‘국민 화합’을 표방하며 경쟁 정파들을 달래고자 친위 세력과 까칠한 자들을 후방에 포진시키는데도 벌써 이동을 현재 소장 후보자 지명, 윤창중·인요한·박효중·안종범의 인수위 요직 임명 등에서 보듯 우익 성향이 두드러진다.

방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전 현재소장도 강한 보수 성향 인물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변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때 검찰의 12·12와 5·18 사건 관계자 불기소 처분을 뒤엎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형법불소속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법과 질서”

또한 그는 우파 전직 의원 박세일이 이끄는 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장, 박근혜의 외곽 지지 단체 총정미대정책포럼의 고문을 지냈다. 그리고 그는 지난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조선일보>가 젊은이들에게 쓴 소리는 하지 않고 ‘아침’하려고 하는 게 불만이다. … 반값 등록금이니 해서 달랠 한 얘기만 들려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차 박근혜의 인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친위파 중심으로, 더 우익적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다.

사실, 지배계급이 총선 때부터 일찌 단결해 박근혜를 밀어줬다는 것 자체가 지배계급이 앞으로 ‘강한’ 정권을 보길 원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내는 국제든 경제 위기가 전례 없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

지배계급이 총선 때부터 일찌

단결해 박근혜를 밀어줬다는 것 자체가 지배계급이 앞으로 ‘강한’ 정권을 보길 원한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자 절망 시대’가 되지 않으려면 좌파들의 꾸준한 폭로와 노동자 단결이 필요하다.

다. 실제로 박근혜의 대선 공약 가운데 경찰 2만 명 증원이 포함돼 있었고, 지금 진행 중인 정부 개편에는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게 포함돼 있다. 두루 알다시피 경찰청은 행안부, 아니 안행부 소속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최대의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 모든 곳의 우파들이 걸핏하면 거론하는 전형적인 ‘로앤오더’, 즉 범죄서의 의제들이다.

또, 박근혜가 앞으로 근절하겠다고 선거 때부터 줄곧 내세운 ‘4대악’은 실업, 빈곤, 질병, 차별 등이 아니라 성폭력, 학교 폭력, 가정 파과 범죄, 불량 식품이다. 이 가운데 불량 식품은 자기에게도 유머 감각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끼워넣기 식으로 집어넣은 것 같다. 물론 박근혜 선본 관계자인 새누리당 의원 윤영희가 “불량 식품은 쪼든기나 아불로가 아니다. 불량 식품 근절은 ‘생활의 악’과 전면전”이라고 주장했지만 말이다.

‘로앤오더’ 정부들이 정말로 근절하고 싶어 하는 게 성폭력, 학교 폭력, 가정 파과 범죄 등이 아닌은 레이건 정부나 마거릿 대처 정부 등을 경험한 근본적 사회 개혁 지지자들이 다 안다. 우리는 ‘로앤오더’ 정부들이 그런 범죄들을 근절할 수 없음도 잘 안다. 우리는 우파 정부가 그런 음악 범죄 근절을 순전히 벌미 삼아 우파를 결집시키고, 진정한 이슬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떼 데로 돌리고, 경찰력 강화를 꾀하고, 그렇게 해서 강화된 경찰력을 소위 시국

치안에 사용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어느 곳에서도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강성 우파 정부는 좌파, 특히 급진적 좌파 단체들을 사찰하고 거들 괴롭힌다. 그리고 흔히 이민자들을 속죄양 삼는다. 한국 합청은 행안부, 아니 안행부 소속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최대의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 모든 곳의 우파들이 걸핏하면 거론하는 전형적인 ‘로앤오더’, 즉 범죄서의 의제들이다.

국가 탄압이 아무도 물리칠 수 없는 불거지 한을 일어났지만, 노동계급 전체는 저항할 자신이 없었고, 따라서 충분히 행동을 조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KPD는 봉기를 동반하는 총파업이라는 초강수 대응을 호소했다.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KPD는 전술적 후퇴를 감행하지는 않고, 오히려 폭탄을 터뜨려 노동계급을 ‘분발’시키라고 당 산하 군사조직에 지시했다. 브레슬라우와 할

레이서는 폭탄이 터졌지만, 베를린에서는 어림도 없었다. 이런 초좌파적 전술들의 결과는 뻔했다. 노동계급의 참패였다. KPD의 초좌파주의는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도 다시 도져 이번에는 훨씬 더 큰 재앙, 즉 히틀러의 집권이라는 재앙을 자초했다.

단결한 대중 투쟁만이 이윤과 권력을 위해 작정을 하고, 우리는 우파들에 대한 놓으면서도 그 정책의 결과를 조금치도 고려하지 않았다. 9월 사태 동안 PSI만큼 두려움에 허둥대며 마비된 단체는 없었다. 그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을 조성한 게 바로 PSI 자신이었는데도 말이다. (트로츠키) 그 결과 공장 점거 운동

은 패배했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운동이 몇 년 새 급성장해, 그람시를 수감시키는 등 혁명 운동을 완전히 분쇄했다. 1921년 3월 독일 공산당 KPD의 소위 ‘공세 이론’에 따른 초좌파적 전술도 노동운동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 당시 작센 주재 경찰이 만스펠트 구리 광산을 점령하는 불발사태가 발생했다. 국지적인 저항은 일어났지만, 노동계급 전체는 저항할 자신이 없었고, 따라서 충분히 행동을 조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KPD는 봉기를 동반하는 총파업이라는 초강수 대응을 호소했다.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KPD는 전술적 후퇴를 감행하지는 않고, 오히려 폭탄을 터뜨려 노동계급을 ‘분발’시키라고 당 산하 군사조직에 지시했다. 브레슬라우와 할

레이서는 폭탄이 터졌지만, 베를린에서는 어림도 없었다. 이런 초좌파적 전술들의 결과는 뻔했다. 노동계급의 참패였다. KPD의 초좌파주의는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도 다시 도져 이번에는 훨씬 더 큰 재앙, 즉 히틀러의 집권이라는 재앙을 자초했다.

단결한 대중 투쟁만이 이윤과 권력을 위해 작정을 하고, 우리는 우파들에 대한 놓으면서도 그 정책의 결과를 조금치도 고려하지 않았다. 9월 사태 동안 PSI만큼 두려움에 허둥대며 마비된 단체는 없었다. 그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을 조성한 게 바로 PSI 자신이었는데도 말이다. (트로츠키) 그 결과 공장 점거 운동

은 패배했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운동이 몇 년 새 급성장해, 그람시를 수감시키는 등 혁명 운동을 완전히 분쇄했다. 1921년 3월 독일 공산당 KPD의 소위 ‘공세 이론’에 따른 초좌파적 전술도 노동운동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 당시 작센 주재 경찰이 만스펠트 구리 광산을 점령하는 불발사태가 발생했다. 국지적인 저항은 일어났지만, 노동계급 전체는 저항할 자신이 없었고, 따라서 충분히 행동을 조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KPD는 봉기를 동반하는 총파업이라는 초강수 대응을 호소했다.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KPD는 전술적 후퇴를 감행하지는 않고, 오히려 폭탄을 터뜨려 노동계급을 ‘분발’시키라고 당 산하 군사조직에 지시했다. 브레슬라우와 할

레이서는 폭탄이 터졌지만, 베를린에서는 어림도 없었다. 이런 초좌파적 전술들의 결과는 뻔했다. 노동계급의 참패였다. KPD의 초좌파주의는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도 다시 도져 이번에는 훨씬 더 큰 재앙, 즉 히틀러의 집권이라는 재앙을 자초했다.

단결한 대중 투쟁만이 이윤과 권력을 위해 작정을 하고, 우리는 우파들에 대한 놓으면서도 그 정책의 결과를 조금치도 고려하지 않았다. 9월 사태 동안 PSI만큼 두려움에 허둥대며 마비된 단체는 없었다. 그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을 조성한 게 바로 PSI 자신이었는데도 말이다. (트로츠키) 그 결과 공장 점거 운동

은 패배했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운동이 몇 년 새 급성장해, 그람시를 수감시키는 등 혁명 운동을 완전히 분쇄했다. 1921년 3월 독일 공산당 KPD의 소위 ‘공세 이론’에 따른 초좌파적 전술도 노동운동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 당시 작센 주재 경찰이 만스펠트 구리 광산을 점령하는 불발사태가 발생했다. 국지적인 저항은 일어났지만, 노동계급 전체는 저항할 자신이 없었고, 따라서 충분히 행동을 조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KPD는 봉기를 동반하는 총파업이라는 초강수 대응을 호소했다.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KPD는 전술적 후퇴를 감행하지는 않고, 오히려 폭탄을 터뜨려 노동계급을 ‘분발’시키라고 당 산하 군사조직에 지시했다. 브레슬라우와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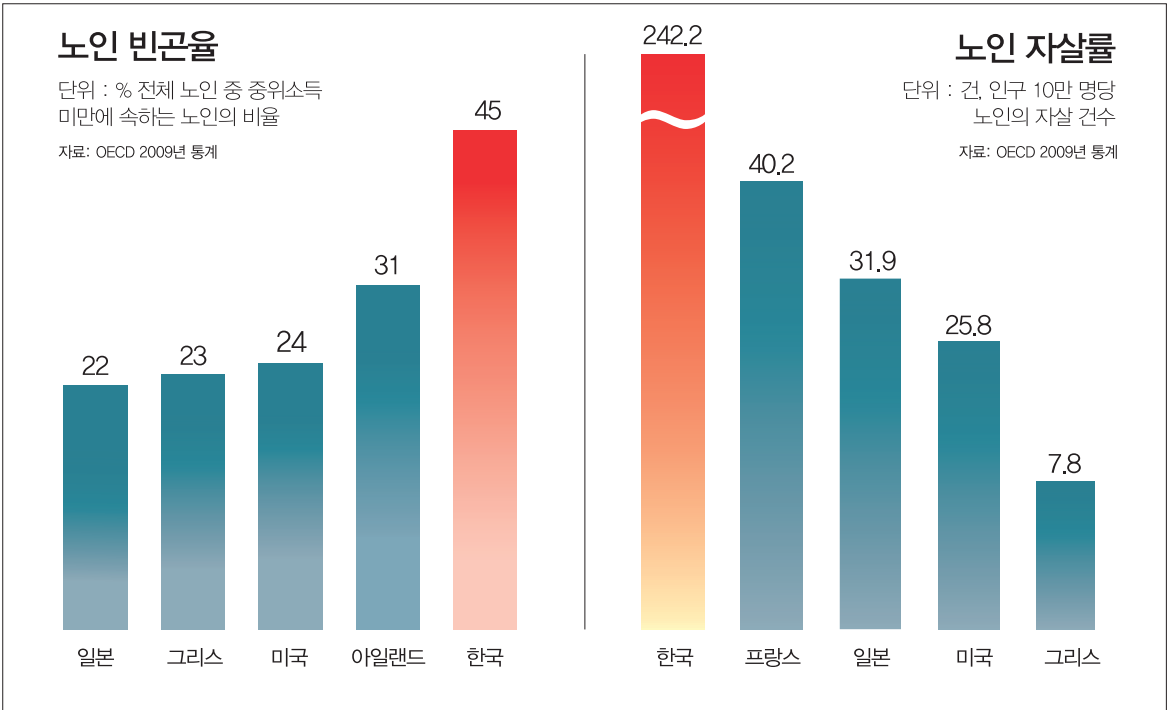
레이서는 폭탄이 터졌지만, 베를린에서는 어림도 없었다. 이런 초좌파적 전술들의 결과는 뻔했다. 노동계급의 참패였다. KPD의 초좌파주의는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도 다시 도져 이번에는 훨씬 더 큰 재앙, 즉 히틀러의 집권이라는 재앙을 자초했다.

로 그 덕분에 승리를 거머쥌 수 있었다. 물론 다른 승인勝因들도 있었지만, 지배계급 전체의 단결과 우파 전체의 단결이 가장 큰 승인이었다. 지배자들의 자신감은 노동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의 좌절감과 흔히 동전의 앞뒷면 관계이다. 박근혜 당선과 우파 재집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다. 2004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 부시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도 미국의 반전 운동과 대안세력과 운동은 ‘멘붕’에 빠졌고, 회복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지배자들의 자신감은 오레가 지 못할 수도 있다. (1) 부패 추문으로 그들 사이에 심각한 내분이 일어나거나, (2) 경제 위기가 도무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무한정 질질 끄는 듯하거나, (3) 탄압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계속 도세하거나, (박근혜 정부는 이 세 가지 상황에 직면할 충분하고도 남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지배자들의 자신감은 정반대로 좌절감으로 바뀔 것이다.

(1) 부패 : 뇌물 수수, 횡령, 직무상의 부당 취득, 권력 오용·남용, 정실 인사, 불법, 부정부정 등 각종 부패가 고질병 수준인 집단들이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을 이루고 있어서 그의 앞길은 지뢰밭이다. 거의 제 모든 부패로 규정될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부패는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와해시켜 통치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지배자



이런 끔찍한 현실 때문에 박근혜가 한 갖가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치적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들을 책임 전가에 몰두하게 만들어 서로 분열시킨다. 이동훈 임명 시도를 놓고 새누리당과 현재 내 일각에서도 임명 철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가 지금 부패의 상징이 돼 있기 때문이다.

(2) 경제 위기 : 위기가 세계경제 일반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경제에 속하지는 않는 한국의 지배계급은 책임 공방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하지만 국민 국가가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니다. 상부구조는 허깨비가 아니다. 특히, 국가는 고전적인 케인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즉, 재정 확대를 통해, 특히 부자 증세를 통해 대중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는 식으로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나마 경제 회복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인 우파들과 지배계급은 복지 제공을 기피하고 싶어한다. <레프트21>은 고전 케인스파적 요구들을 행동강령의 일부로 제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그와 정반대 방향을 지향해 경제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폭로해야 한다.

(3) 아래로부터의 저항 : 아래로부터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박근혜의 핵심적인 약점이자 모순인 신심성 공약의 운명과 연동될 것 같다. 박근혜의 신심성 공약은 그가 경제 위기로 고통받고 분노한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해 재원 문제를 분명히 하지도 않은 채 공약을 ‘납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우파들로부터 공약 수정을 촉구받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분노한 대중을 선거에서 달랠 수 있게 해 준 신심성 공약을 희석시키고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다면, 즉 공약을 사실상 어긴다면 그의 통치의 정당성은 순식간에 사슬누각이 될 것이다.

우파들과 지배자들은 특히 복지 제공을 혐오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복지 제공이 기대를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 권리라는 생각을 고무한다. 반면에 개인의 노력과 경쟁이라는 생각은 경시하게 만든다. 또한 시장의 엄격함과 사용자들의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다. 게다가 자칫 부유층의 조세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순전히 자본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복지는 아예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단지 자본의 집행 기구일 뿐인 것은 아니다. 국가와 자본은 크리스 하원이 말한 ‘구조적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개개 자본가들의 군사인 시야를 넘어 노동자들이 생산 과정 속에 자리 잡고 자신에게 할당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

이런 모순 때문에 박근혜는 복지를 제공하되 생색내기식의 일방한 복지만을 제공할 것이다. 그것도 직접제로는 간접세로 노동계급이 재원을 대도록 할 것

이고, 그나마 결과는 노동계급 내에서의 소득 재분배일 것이다(노동계급 가운데 좀더 형편이 나은 부분을 희생시켜 좀더 궁핍한 부분에게 배분하기, 말하자면 아랫줄 빼서 윗줄 끼기 식). 사실, 이것이 1880년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프로그램 이래 1백30년 역사의 복지국가의 실체다. 물론 그래도 복지는 필요하고 따라서 정취할 가치가 있다.

아킬레스건

그러므로 <레프트21>은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 복지 제공을 폭로하고, 복지 공약의 조삼모사식 배신을 폭로하고, 조세 불평등을 폭로해야 한다. 특히, 조세 불평등 폭로와 함께 요구해야 할 부자 증세는 극도로 예민한 쟁점이다. 실제로 시행된다면 정부는 자본가와 그들의 압력단체로부터 큰 압박을 받게 되고 자칫 그들과 척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이 보기에 알랑가리 그지없던 사회정책을 시행한 노무현이 그토록 부유층과 그 정치인들의 증오를 샀던 주된 이유로 세금(특히 증세) 문제였다.

박근혜 복지 공약은 세금 문제가 아킬레스건이다. <레프트21>은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법인세 감면을 반대해야 한다. 동시에, 이미 역진세인 세금들—특히 부가세, 관세, 소비세, 주민세, 지방세 등—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것도 반대해야 한다.

물론 자본주의 하에서 세금 문제를 둘러싼 투쟁은 주로 자본가 계급과 중간계급이 벌어 왔고, 그것도 성공적으로 벌어 왔으며, 노동계급은 거기에 끼여들기가 흔히 어려웠다. 그러므로 <레프트21> 지지자들은 세금 문제를 둘러싸고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에는 일단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에서 박근혜의 결정적 승인勝因이었지만 집권 유지에는 최대 장애물이 될 그의 복지 공약을 폭로하기 위해 <레프트21>은 조세 정의의 부재를 예리하게 폭로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의 복지 공약 몰타기나 누더기 만들기를 폭로할 때 그것을 사회개혁 운동가들의 행동강령적 요구들과 연관시킴으로써 운동 건설의 기회도 엿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서 순전히 자본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복지는 아예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단지 자본의 집행 기구일 뿐인 것은 아니다. 국가와 자본은 크리스 하원이 말한 ‘구조적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개개 자본가들의 군사인 시야를 넘어 노동자들이 생산 과정 속에 자리 잡고 자신에게 할당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

박근혜가 승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요인 때문에

그는 조만간 통치의 정당성을

잃고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될 것 같다.

봐야 한다.

요컨대 박근혜가 승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요인 때문에 그는 조만간 통치의 정당성을 잃고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될 것 같다. 다만,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일지, 위기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이 거의 틀림없이 올 것이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곧바로 대중 저항으로 이어질까?

박근혜의 복지 공약을 믿고 그를 지지했던 후진적인 노동자 부분이 그의 사실상의 공약 파기에 분개해 먼저 투쟁에 나설 가능성은 비록 아예 없진 않다 해도 매우 작은 것 같다. 그보다는 박근혜의 조삼모사식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그동안 안 얻은 이득을 강제로 회수당하게 된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위기 덕분에 저항할 자신감이 되살아나 반격하기 시작하는 시나리오가 더 큰 가능성일 것 같다.

저항의 가능성

그렇다 해도, 만일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그것은 특정한 양질적인 과정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즉, 수많은 작은 노동자 투쟁들이 대부분 비기거나 패배하고, 간간히 소수의 투쟁은 승리를 거둬, 계급투쟁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다가, 마침내 강성 정권의 정치적 위세가 현저히 약화된 것을 보고 노동계급 대중의 자신감이 올라 결국 큰 투쟁이 분출하는 그림 말이다.

물론 특정한 경제적 투쟁이 정치적 투쟁으로 급성장하는 시나리오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고위 상관간부층의 개혁주의적 영향력을 아래로부터 돌파할 만한 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당장은 충분치 않을 것 같다.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경제 불황으로 말미암아 그럴 것이고, 게다가 강성 정권의 등장으로 자신감을 얻은 사용자들의 탄압도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혁주의적 노조 상관간부층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는 사회 변혁적 노동자 대중정당이 존재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좌익 정치조직들은 너무 작으니까 종파적 편협함과 정치적 성으로 말미암아 노동자 투쟁을 더 커지는 것보다는 좌익적이지만 흔히 공허한 슬로건 내뿜기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영향력에 대응해 기보다는 당파는 오히려 뜻하지 않게 개혁주의자들의 입지를 강화해 주는 결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필자 생각으로는, 정치 영역에서든 산업 영역에서든 공동전선이 잘 구축돼 이력적력 성공적인 저항이 전개될 때 비로소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은 필자가 다른 곳에서 발표한 글을 조금 수정해 고친 것이다

진보의 진로 논쟁

노동 중심성과 노동자 연대는 ‘철지난’ 게 아니다

대선 이후 진보진영의 갈 길에 대한 모색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진보정의당과 진보신당 등에서는 ‘노동 중심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진보정의당 일각에서는 ‘노동 중심성’ 강화가 아니라 안철수나 민주통합당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다. 한 참여당계 인사는 조직 노동자와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지난 대안”이라고 깎아내렸다.

진보신당 일각에서는 노동 중심성보다 다양한 피억압자들의 “무지개 연대”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노동계급의 이질성이 커졌고 노동자의 의식이 소비 문화에 포섭됐기 때문에 더는 사회 변화의 핵심 주체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제기에는 여러 논점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우선 ‘노동 중심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흔히 노동 중심성을 노동자들의 작업장의 경제적 요구만을 중시하는 협소한 노동자주의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동자주의와 노동 중심성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해 온 노동계급 중심성은 자본주의의 여러 억압과 착취에 맞서고,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리를 진전시킬 결정적인 힘을 노동계급이 가지고 있다는 요지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독재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데도 노동계급의 투쟁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은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면서 독재로 회귀하는 것을 막고 민주화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

노동자계급은 직접 생산을 담당하며 이윤을 만드는 계급이기 때문에 체제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다.

즉 노동 중심성은 억압받고 착취받는 사람들의 “무지개 연대”가 승리로 나아갈려면 누가 주도적 구실을 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전략을 제시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노동 계급이 과연 이런 힘이 있는지는 이견을 제시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단결의 잠재력

첫째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 노동계급의 이질성이 커졌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힘들 것이라는 제기다.

이런 주장은 흔히 조직된 정규직은 싸우려는 의지가 없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부분의 노동자들은 처지가 너무 열악해 싸움에 나서기 힘들다는 생각에 바탕하고 있다. 이들의 단결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에 독일 등 제국주의 국가의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도 “노동귀족”이라고 불렸지만 1918년 독일 혁명에서 이 노동자들이 혁명의 주체로 등장했다. 최근 그리스 등 유럽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 등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또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저항에 나설 수 있다. 학교에서 “유령”취급을 받으며 짧은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해 온 청소년노동자들도 저항에 나서 승리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줬듯이 말이다.

물론 이 두 세력의 단결은 결코 자동적인 과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단결할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현실 때문에 이들이 단결할 잠재력은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과 12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위해 파업을 했을 때 정규직 대의원들이 대대인력을 저지하며 함께 싸워 공장을 멈춰 세우기도 했다.

변혁적 활동가라면 이런 가능성을 보면서 노동자들의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조직, 미조직 부분의 차이를 과장하는 태도로는 이런 단결을 이끌기 힘들 것이다.

의식의 변화

둘째는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적인 의식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키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소위 ‘존재론 배반한 의식’ 논리다.

이것은 추상적 선전과 이데올로기만을 중시하는 입장과 연결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생산관계 속에서의 적대적 관계 때문에 자본가들과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설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이런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의식을 바꿀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이,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국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하는 과정을 통해 쌓였던 편견을 깨뜨리고, 이제까지 자본주의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자신의 힘을 자각하면서 거대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진보 활동가들은 노동대중 속에서 함께 행동을 건설하며 노동계급 의식의 발전을 도모해 가야 한다. 노동 대중과 거리를 둔 채 추상적 선전을 늘어놓거나, 갖가지 이유로 노동계급 정치조직들의 단결과 공동행동을 거부하는 종파적인 태도로는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없다.

부르주아 정치세력과의 무책임한 연합을 우선해서 노동계급 정치세력의 갈등과 분열을 자초해서도 안 된다.

노동중심 정치세력화와 노동계급의 단결은 여전히 중요하다.

정선영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현 상황을 돌파하려면 정공법이 필요하다

최병승·천의봉 동지의 철탑 농성이 1백 일을 넘기고 있다. 철탑 농성은 광범한 정치적 연대의 초점을 형성하며, 그 힘을 작업장 투쟁으로 연결하는 구실을 했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신규채용을 강행하고, 불법 파견을 무마하려고 도입한 직고용 계약 직 노동자들까지 해고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농성장 철거를 시도하며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옥죄고 있다. 그러나 1월 8일과 18일 비정규직지회 노동자, 해고자, 지역 단체, 노조 활동가 등이 모여 울산지법이 집행하려던 강제철거를 막아냈다.

불법파견 당사자인 정몽구는 귀빈 대접을 받고, 불법파견 피해자인 최병승·천의봉 동지는 철거 대상이 되는 사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온갖 부패와 부정의 집탕밥인 이동을 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추천된 것을 보면 저들에게 정의는 안중에도 없다.

현대차 사측은 3천5백 명 신규채용이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역겨운 말을 내뱉으며, “하청지회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조차 무시하는 집단이 법을 지키겠다며, 1백 일을 농성하고 있는 두 동지를 강제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인가.

지금껏 차별과 탄압에 맞서 싸웠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야말로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래서 2010년 CTS 점거와 이번 철탑 농성에 대한 광범한 지지와 연대가 있었던 것이다. 이 투쟁이 차별받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들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사측은 신규채용을 강행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지회를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고립시키려 한다. 게다가 농성장 철거 같은 탄압도 강화하려 한다. 1월 23일 2차 신규채용도 강행했다.



생산에 타격을 가하고 투쟁의 초점을 형성하려면 점거 투쟁에 나서야 한다 철탑 농성자 철거에 맞서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들.

박근혜 당선으로 정몽구는 자신감을 얻어 공격을 강화하는 듯하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정규직지부 지도부도 비정규직지회에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함께 힘을 합쳐 맞서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지회가 독자 교섭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남은 문제는 독자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할 힘을 모으는 일이다.

사측을 확실하게 압박하려면 다른 도리 없이 점거파업을 해야 한다.

지금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점거파업은 분명히 어려운 결정일 것이다. 충분치 않은 파업 참가자 규모로 탄압의 우려도 클 것이고, 작업장 분위기 때문에 아예 성사 자체에 대한 고민도 될 것이다.

이런 어려움과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세가 정부 교체기여서 꼭 나쁜 것

만도 아니다. 게다가 현재 상황에서 점거 말고 달리 방도가 없는 듯하다. 생산에 타격을 가해 사측을 압박하고, 흔들리는 조합원들 끌어모으고, 연대의 초점을 형성하려면 말이다.

게다가 제대로 맞붙어 싸워 보지도 못하고 맥없이 쓰러지는 것은 이후 투쟁을 위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사측의 공세와 신규채용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간을 더 끄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하다.

만약 투쟁에 나선다면 박근혜 취임 전에 견제구를 날려야 한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투쟁적 수단 외에는 사측과 보수언론, 심지어 현대차지부 지도부조차 “현실적 대안”을 선택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에 맞설 무기가 없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은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정당한 요구다. 사내하청 노동자들 중 일부를 교섭안에서 제외하기 시작하면 노동계급의 단결이 무너져 계속 밀릴 수 있다.

이 점을 잘 아는 사측은 “2·3차 업체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전원 전환해야 하나”며 1차 하청 노동자와 2·3차 하청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다면 그들을 이반시켜, 우리의 힘은 약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현대차 외의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큰 청년들의 연대를 계속 얻기 위해서도 요구를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는 청소·식당·경비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핵심 내용(근무 인정, 공정

사수, 임금·단협 소급 적용)에서 후퇴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규채용을 “쓰레기 안”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사측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권리를 강그리 무시했기 때문이다.

사측의 압박이 강화되고, 심지어 정규직지부 지도부조차 압력을 넣고 있는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더 이상의 후퇴를 막고, 투쟁 속에서 다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이라는 요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투쟁의 무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회나 후퇴가 아니라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야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투쟁에 광범한 연대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허수영 노동자연대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쌍용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국정조사 약속 지키고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쌍용차 문제는 박근혜가 취임도 전에 벌써 말을 바꾸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1월 10일 쌍용차 사측과 기업노조가 무급휴직자 복귀에 합의하자 새누리당은 이를 핑계 삼아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뒤집고 있다.

물론, 무급휴직자 복귀는 해고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단식과 농성 등 끈질긴 투쟁의 결과다. 폭넓게 형성된 사회적 지지와 연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쌍용차의 문제가 해결된 것인 양 하는 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무급휴직자 복귀는 이미 3년 전에 이뤄졌어야 할 문제를 질질 끌다가 이제야 이행한 것일 뿐이다. 게다가 사측은 체불 임금을 포기해야 복귀시켜 주겠다고 무급휴직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사측은 무급휴직자와 나머지 해고자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공장 안과 밖을 가르려는 시도도 계속하고 있다.

‘해고자들이 복귀하면 일자리가 불안정해진다’, ‘국정조사 하면 평범 경제를 망친다’며 이간질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막아 고통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이간질에 동조하며 ‘국정조사 반대’ 서명까지 받고 다니는 친사측



쌍용차 문제는 이미 사회적 의제다. 해고자 복직이야말로 “민생”이다 1월 11일 인수위 앞

노조 지도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해고자와 희망퇴직자, 비정규직까지 2009년에 쌍용차에서 쫓겨난 모든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통과 절망에 내몰려 있다. 또한 살인해고와 살인진압의 진실과 책임도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사측과 경찰, 정부가 손매·가압류·구상권 등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돈은 무려 4백30억 원에 이른다.

쌍용차 정리해고는 결코 불가피한 게

아니었다. 2004년 쌍용차를 인수해 기술만 빼가고 회사를 거덜 낸 상하이차는 막대한 이윤만 챙기고 ‘먹튀’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졌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상하이차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 떠넘기기 위해 쌍용차를 그 본보기로 삼았다.

그러나 노동자들도 쉽게 무릎 꿇지 않고 77일간의 영웅적 공장 점거파업으로

맞섰다. 비록 실질적인 연대 투쟁이 충분치 않아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고통전가에 맞서 얼마나 강력히 싸울 수 있는지를 보여 준 것이다.

이후 마힌드라 측은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도약’ 운운했지만,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쌍용차의 비극을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대량해고와 살인적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 무급휴직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해고자, 희망퇴직자, 정리해고자 등이 모두 일터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억울하게 죽어간 24명과 그 가족들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노동자 쥐어짜기

이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지난해 회사 측 발표에도 쌍용차는 부도 이전 생산대수를 회복했다. 인기 차종을 생산하는 3라인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1백61퍼센트에 이른다.

이종택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1인당 생산대수는 23.6대”로 2009년보다 2배가 증가했다. 정리해고 이전보다 적은 수의 노동자들이 엄청난 노동시간·노동강도를 감내

하며 비슷한 물량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쌍용차의 최대주인 마힌드라 측은 ‘아직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해고자 복직을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투자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기술만 이전하고 있기에 마힌드라가 제2의 상하이차가 되는 것 아니냐는 ‘먹튀’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

2009년 투쟁 당시에 노동자연대함께 등 진보진영 일부가 주장했듯이 정부가 쌍용차를 해외매각하지 않고 공기업화했다면, 이런 비극과 불안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왜 4대강 삽질과 부자 감세와 미국산 첨단무기 수입에 쓰는 엄청난 돈을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쓸 수 없다는 것인가.

철탑에 오른 노동자 세 명은 무급휴직자 복귀 발표 후에도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이 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노동자들이 당당히 어깨를 펴고 공장으로 돌아갈 그 날까지 투쟁과 연대를 이어나가자.

김지윤

KTX 민영화의 진실

정부의 속 보이는 거짓말들



사진 출처 Kelly B. Huson(블리커)

민영화는 철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투자를 줄여 대형 사고를 낼 것이다 1백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2008년 미국 메트로링크 열차 사고.

사고가 줄어줄 것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철도 관제와 수송을 함께하고 있어 각종 사고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 사측이 “KTX 주요 부품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가 빈발하는 진짜 이유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을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영화의 전 단계로 코레일의 ‘상업적 운영’을 밀어붙였는데, 이 과정에서 추진된 외주화와 시설·운영 분리는 종합적인 안전 점검·관리와 신속한 사고 대처를 어렵게 만들었다.

또, 인력 감축과 비정규직 확대, 안전 점검 주기 축소도 사고의 원인이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민영화는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철도는 궤도·차량·신호·통신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운영해야만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계획대로 되면, 철도 관제권은 철도시설공단 이 갖고, 지하철 관제권은 철도공사가 갖게 돼 분리된 체계가 된다. 그러면 지하철과 철도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정보 교환과 의사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질 것이다.

재정 부담 감소?

국토부는 KTX를 민영화하면 민간 사업자에게 선로사용료를 코레일(운송수

입의 30퍼센트)보다 더 많이(운송수입의 40~50퍼센트) 받아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더 빨리 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민간 사업자에게 불리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코레일은 고속철도 건설 비용의 일부인 4조 5천억 원을 부채로 떠안아 이 부채의 이자를 갚는 데만도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는 데 반해, 민간 사업자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부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알짜 사업을 넘겨 준 코레일의 부채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면 코레일은 그동안 KTX 수익으로 지원해 온 무궁화·새마을 같은 일반열차 사업이나 산간벽지의 비수익 노선을 축소·폐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국토해양부 고용성 철도운영 과장은 “현재 KTX 수입의 3천억 원 정도를 일반철도에 교차지원 하는데, [민영화는] 교차지원을 끊”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KTX 민영화는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정부 재정적자를 일부 줄이고 민간 사업자에게는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일 뿐이다.

요금이 낮아진다?

국토부는 KTX를 민영화하면 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민간 사업자는 현재 KTX 요금보다 15퍼센트를 인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후에도 요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만 인상할 수 있도록 묶으면, 요금을 대략 20퍼센트 정

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KTX 요금 인하’는 조삼모사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코레일이 이미 KTX 요금을 20퍼센트 가까이 할인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사업자는 KTX 기본운임을 낮춘다고 발표하고서, 코레일이 이미 실행 중인 다양한 할인을 없애거나 요금이 비싼 특실을 늘리는 방식으로 KTX 요금을 인상하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영국 등에서 철도 민영화 이후에 요금이 폭등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반면, 코레일의 적자가 늘어나면서, 무궁화나 새마을처럼 돈 안 되는 열차가 폐지돼 사람들은 옮겨 겨자 먹기로 비싼 KTX를 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나아가 산간벽지에 사는 사람들은 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철도 이용 요금은 사실상 크게 인상되는 셈이다.

또, 코레일은 적자 확대를 빌미로 철도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으로 공격을 강화하게 될 텐데, 이는 다른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것이다.

반면, 민간 사업자는 국토부의 발표대로 요금을 인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거둘 것이다. 왜냐하면 KTX 영업이익률은 지금 33퍼센트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회사는 설사 요금을 약간 낮추더라도 이른바 ‘적정 수익(이익률 8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다.

강동훈

▶ 관련기사 16면

영국의 철도 민영화 20년

재앙의 역사

영국 철도 민영화 20년을 즈음해, 기업들이 이윤을 챙기는 동안 대중이 더 많은 돈을 내며 악화된 서비스를 받아야 했던 과정을 폭로한다.

에섹스의 첼름스퍼드에 사는 노동자가 철도를 이용해 런던으로 출퇴근할 경우 한 달에 3만 4천8백70파운드[약 60만 원], 1년이면 3천5백40파운드[약 6백만 원]가 든다. 리버풀에 사는 노동자가 맨체스터를 출퇴근 하는 경우도 그 비용이 1년에 2천8백 파운드[약 4백80만 원]가 든다. [이 거리는 서울 역에서 수원역 사이보다 짧은데 현재 서울역과 수원역을 오가는 요금은 1년에 80여만 원 정도다.]

지금 영국 통근자들은 소득의 15퍼센트 정도를 통근비용으로 쓰고 있다. 영국 철도는 전 세계에서 요금이 가장 높고 유럽에서 가장 혼잡하다. 주로 만성적인 투자 부족, 과잉한 철도 운영 방식, 엄청나게 뽑아내는 이윤 때문이다.

이것은 20년 전 효율성을 높일 거라며 실시된 민영화에서 시작됐다.

1993년 1월 19일 존 메이저 수상이 이끌던 보수당 정부는 영국철도청이 소유했던 자산 매각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켜 철도가 사기업 손아귀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보조금

영국철도청 자산은 65억 파운드[약 11조 원]에 달했다. 보수당은 그 자산을 19억 파운드[약 3천2백15억 원]에 팔아 치웠다. 당시 야당이던 노동당은 민영화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지적하며 재국유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노동당은 보수당과 마찬가지로 철도에 대한 정부 지출 제한 정책을 고수해 철도에 투자할 돈이 말라 버렸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철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민영화 이후 두 배로 늘어 2009~10년에 54억 파운드에 달했다. 요금도 물가인상률보다 가파르게 올랐다.

하지만 이 돈의 대부분은 이윤에 따라 철도 노선을 운영하는 사기업들에 갔다. 여기에는 직접 보조금도 포함된다. <파이낸셜타임스>를 보면 지난해

생명을 삼켜 달리는 열차

2002년 당시 철도를 운영하던 사기업 ‘레일트랙’이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포터스바’에서 일곱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기업 ‘자르비스’는 처음에는 누군가 고의로 선로를 파괴했다고 주장했고 나중에 파산했다. 민영화됐던 선로 유지 업무를 국유화 하면서 설립된 ‘네트워크레일’이 안전보건의상의 실수를 시인하는 데 9년이 걸렸다. 그 2년 전 해 트윙필드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네 명이 죽었다. ‘레일트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안전 기록지조차 보관하지 않았다.

돈벌이에 눈이 먼 사장들

올해 요금은 9.2퍼센트 인상된다. 철도기업 사장들은 자기 주머니를 챙기고 있다. ‘퍼스트그룹’ 사장 팀 오톨은 지난해 자신의 임금을 동결하는 ‘쇼를 했다. 하지만 그는 배당으로 1백만 파운드를 챙겼다. 셰르코의 크리스토퍼 하이만은 배당, 임금, 보너스를 합쳐 4백만 파운드를 가져 갔다.

영국 정부는 철도 기업들에게 4억 9천만 파운드(약 8백억 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사기업들이 이루지 못한 수익을 보장해 줬다.

지난해 6월 철도 개선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비용이 늘어난 핵심 이유로는 정부 대차대조표에 ‘네트워크레일’ 적자를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지급한 높은 이자, 노후한 선로 시스템으로 발생한 비용들, 철도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윤 보장,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이 있다. 이 비용은 민영화 이후 총 1백10억 파운드(약 18조 6천억 원), 해마다 12억 파운드(약 2조 원)에 이른다.”

전체 철도 네트워크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사기업들은 합리적으로 투자 계획이나 철도 차량 개선 계획을 내놓을 수 없다.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맥널티 보고서도 이 문제들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더 많은 분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해마다 1.2조 파운드를 아낄 수 있는 명백한 대안, 재국유화는 다른 철도 사기업들이 재국유화 대신 “비용절감”을 하면 된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하지만 철로 유지·보수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됐던 사기업 ‘레일트랙’은 사실상 ‘네트워크레일’로 재국유화됐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워크> 2336호 / 번역 최용찬

KTX 이용객이 보내 온 편지

“내 주머니는 홀쭉해질 때 사장들은 살찐 것”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부산 출신 학생이다. 그래서 집에 오갈 때마다 기차를 탄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 전 내가 이 얘기를 꺼내자, 어머니는 대뜸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럼 민간 기업이 코레일하고 가격 경쟁을 하게 되나?” 정부가 KTX 민영화로 요금이 낮아질 거라고 홍보해 왔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물음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KTX 탈 돈이 없어서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를 타고 집에 가곤 하는 내겐 좋을 것이 없다. 오히려 앞으로 더 비싼 돈을 내야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KTX 민영화 때문에 앞으로 비교적 값이 싼 새마을호, 무궁화호

가 줄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코레일은 KTX에서 나는 수익으로,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에서 나는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KTX는 2010년에 약 30퍼센트의 영업 이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알짜배기’다. 그런데 이런 ‘알짜배기’ 노선을 사기업에 떼주면 어떻게 될까?

코레일은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값싼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새마을호는 2015년에 없어진다고 한다. 그러니 나는 결국 옮겨 겨자 먹기로 비싼 KTX를 타야만 한다. 벌써 요금이 걱정이다.

게다가 KTX 요금 그 자체도 낮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정부는 수서발 부산행 KTX의 요금이 15퍼센트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평균 18.8퍼센트

정도 할인하면 혜택을 없애버리면 요금 인하가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

코레일의 청소년 할인카드가 얼마 전에 폐지됐는데, 그전까지 나는 KTX는 최대 30퍼센트, 무궁화호는 최대 15퍼센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수서발 KTX 민영화가 경쟁 도입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서울역보다 수서역이 더 가깝기 때문에, 나는 수서발 KTX가 개통하면 이 열차를 타지 서울역을 타진 않을 것이다. 코레일과 사기업의 서비스 질을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민영화가 되면, 그 기업은 수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열차 보수나 직원

을 늘리는 데는 돈을 더 안 쓸 것 아닌가.

결국 KTX 민영화가 이뤄지면 그려질 그림은 이렇다. 나는 지금도 일찌감치 표를 예매하지 않으면 타기가 쉽지 않은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게 더 어려워져 애를 태울 것이고, 옮겨 겨자 먹기로 할인혜택이 줄어든 값비싼 KTX를 타야 할 것이다. 그나마도 영국처럼 언제 요금이 대폭 오를지 모른다.

이렇게 내 주머니가 홀쭉해질 동안, 철도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화에 직면할 것이다.

KTX 민영화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몇몇 기업 사장과 정치인들만 살찌울 것이다. 내가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다.

김동욱

수만 명이 모인 그리스 반파시즘 시위의 성공

“다시는 가스실을 용납하지 않겠다”

“나치 없는 아테네를 만들자!” 1월 19일 아테네에서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에 맞서 행진한 2만 5천 명의 반파시즘 시위대 중 한 명인 고등학생 크리스틴 팔리오다키스가 외친 말이다.

이번 시위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반파시즘 시위였다. 아테네 각지에서, 마나면 북부의 테살로니키 주와 남부의 트리폴리 주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서 온 대표단이 시위에 참가했다.

교사, 보건 의료 노동자, 지방 공무원, 교수, 학생 등이 함께 행진했다. 이들 대부분이 긴축에 맞선 투쟁에 오랫동안 참가한 투사들이다.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파키스탄, 수단 등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도 시위에 함께했다. 그들은 서구 제국주의가 불러온 가난과 파괴에 쫓겨 그리스에서 새 삶을 일구려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리스에서 저임금 노동, 경찰의 괴롭힘, 인종 차별주의적 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종종 고립되고 침묵을 강요당하지만, 이날만큼은 자랑스럽게 행진했다.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좌파 정당이 이 시위를 지지했다.

시위대는 아테네 중심가 오모니아 광장에 집결했다. 오모니아 광장에 있는 문 닫은 상점, 노점상, 구걸하는 사람들은 그리스에 맞이한 경제 재앙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영국 반파시즘연합에서 온 소규모의 대표단이 앞장선 시위 대열은 그리스 의회 건물 앞 신타그마 광장으로 행진했다.

행진과 뮤직 페스티벌이 저녁 늦게까지 계속됐다. 흥겨운 인종차별 반대의 장이었다. 최루탄, 시위 집합용 플라스틱 탄환과 방패로 무장한 경찰은 골목으로 기어 들어갔다.

‘아프리카인 여성단체 연합’의 일원인 로레타 매컬리가 말한 것처럼, “오늘 거리는 우리의 것”이었다.

이날 가장 감동적인 광경은 시위대가 세흐자드 루크만의 관과 가족 곁을 행진하는 모습이었다.

세흐자드는 스물일곱 살의 파키스탄계 이주노동자였다. 그는 1월 17일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칼에 찔려 숨졌다.

살인 용의자 두 명이 구속됐는데, 그들은 황금새벽당 지지자들이다. 경찰은 가해자 중 한 명의 집에서 살해 흉기, 황금새벽당 리플렛 꾸러미를 찾았다. 벽에는 황금새벽당 지도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세흐자드의 친구 라파앗 알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흐자드는 열심히 일하는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공격이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뿐 아니라 모든 이주민들에게 정의가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 파키스탄인 공동체에서 온 자비에드 아슬람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황금새벽당이 세흐자드를 죽였어요.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 해요.”

2012년 6월, 황금새벽당은 지지율



‘절망의 정치’ 파시즘을 끝장내자 1월 19일 아테네에서 열린 반파시즘 시위. 황금새벽당이 의석을 차지한 후 이주민에 대한 공격이 늘고 있다. 좌파가 여기에 맞설 때 ‘절망의 정치’를 끝낼 수 있다.

7퍼센트를 기록하며 총선에서 18석을 얻었다. 그 이후로 황금새벽당은 수많은 폭력을 자행했다.

그들이 자행하는 공격의 절대 다수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인데, 이런 공격은 신고되지도, 기록에 남지도 않는다. 아테네 경찰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기록조차 하지 않는다.

한 난민 단체는 황금새벽당이 의석을 차지한 후 인종차별주의적 공격이 7백 퍼센트나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나치들격대

황금새벽당은 1980년대 초 니콜라스 미차로리아코스에 의해 창립됐다. 그는 이당을 만들 때, 히틀러의 나치들격대를 모델로 삼았다. 황금새벽당은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고 반대자들을 쳐부수려고 선거와 거리 행동 모두를 사용할 준비가 된 정통 파시스트 정당이다.

황금새벽당은 경제 위기가 낳은 절망을 이용해 선거에서 지지를 늘려왔다. 대규모 실업,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복지 삭감과 저임금은 사람들을 비탄의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리스인 15퍼센트가 “생필품”도 살



인종을 넘어 단결한 반파시즘 시위대.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행진한 하리스와 니코스 마코폴로스 부부는 이런 상황을 잘 보여 준다.

하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위기가 우리 가족을 박살내고 있어요. 우리 부부는 1년 넘게 실업자 신세예요. 살림이 정말 쪼들려요.”

“돈이 없어서 시댁의 좁은 아파트에서 신세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식구가 방에 들어가면서 시누이 둘이 부엌에서 자게 됐어요. 사는 게 이게 뭐가요?”

“우리는 이제 이주노동자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를 욕해요.”

황금새벽당은 이 상황을 이용해 그리스인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을 싸움 불이려 한다. 황금새벽당 당원들은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소와 혈액은행을 운영한다. 하지만 이 시설은 그리스인만 이용할 수 있다. 황금새벽당은 기업들이 이주노동자를 해고하고 “그리스인” 노동자를 고용하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심지어 황금새벽당 당원들이 몇몇 동네에서 이주민들을 쫓아내는 캠페인을 벌인 사례도 여러 번 있다. 좌파가 그들에게 도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지역사회 활동으로 파시스트가 성장할 것이다.

그리스 국가는 인종차별주의에 기름을 끼얹은 짓을 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만 6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체포됐고 4천 명이 재판도 없이 출입국 관리소에 갇혔다.

아테네에서 있었던 시위는 파시즘에 맞선 투쟁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다. 동시에 그리스 노동자들은 긴축에 맞설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 줬다. 이런 투쟁만이 파시즘이라는 절망의 정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337호 / 번역 김민수

노동자 공동전선이 성공의 열쇠였다

아테네 시위를 건설하는 데 핵심적 구실을 한 단체는 ‘인종차별과 파시스트의 위협에 반대하는 운동’(KEERAF)이다.

이 단체에는 주요 노동조합, 학계, 좌파 단체, 여러 이주민 단체의 대표자들이 속해 있다.

이들은 어떤 쟁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인종차별주의와 파시즘에 맞선 투쟁에서는 단결한다.

이 단체의 전국조직자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 페트로스 콘스탄티누스다.

그는 인종차별주의와 파시즘에 맞선 운동이 성공하려면 이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민

들과 광범한 그리스 사회가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트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엇보다도 황금새벽당의 선거 기반을 파괴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으로 공들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역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그 때문이에요. 현재 50군데가 넘는 곳에서 건설했죠. 황금새벽당을 저지하는 거리 행동도 계속 건설해야 해요.”

페트로스는 파시즘에 맞선 국제적 연대를 건설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에서 시카고까지 세계 25곳에서 19일 행동을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의 목소리

“파시스트는 전부 꺼져라!”

“나토의 전쟁도 없고 자본가들의 탐욕도 없다면, 어느 누구도 새로운 삶과 희망을 찾아 자기 나라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파시즘에 반대하고 인종차별에 맞서는 운동이다.”

자비에드 아슬람 그리스 파키스탄인 공동체

“이 강패 같은 놈들에게 가족과 친구들이 공격 당했다.

“정부와 파시스트는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기의 책임이 있다며 비난한다.

“우리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다. 우리는 일도 열심히 하고 세금도 잘 낸다.”

로레타 매컬리 아프리카인 여성단체 연합

“우리 학교에 황금새벽당을 지지하는 남학생이 하나 있다. 그 녀석은 내가 양성애자이고 그 사실을 당당하게 여긴다는 이유로 나를 괴롭힌다.

“나는 황금새벽당 녀석들에게 더는 괴롭힘 당하지 않겠노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이 시위에 나왔다.

“파시스트는 전부 꺼져라.”

마리아 콘스탄티누스 청소년

“다시는 가스실도, 분홍색 역삼각형 [나치 수용소의 동성애자 표식]도, 이주민 살해도 용납하지 않겠다.”

와이만 벤틀 영국 ‘반파시즘연합’ 의장 (같은 날 런던에서 열린 연대 시위에서)

왕을 비판했다고 11년형 선고받은

타이 노동운동가 소뭇을 즉각 석방하라

1월 23일 타이 방콕의 형사법원은 노동운동가이자 ‘붉은 셔츠’ 운동(타이 민주화 운동)과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언론인 소뭇 프룩사기웁속씨에게 11년형을 선고했다.

자신이 편집장으로 있던 잡지 〈레드파워〉에 왕실을 비판하는 기사 두 개를 게재한 것을 두고 기사 한 건 당 5년씩 10년, 집행유예 중이던 집시법 위반으로 1년 선고를 받았다.

소뭇에 대한 중형선고는 ‘붉은 셔츠’ 운동으로 분출한 타이 민중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그는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위해 수십 년을 헌신해 온 투사다. 타이 정부는 그가 왕실모독죄 반대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그를 구속하고 지금까지 20개월 동안 재판 없이 구금했다.

타이 지배자들은 60세 노인이 국왕을

비판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20년형을 선고해 결국 감옥에서 죽도록 할 만큼 악독하다.

소뭇은 이런 지배자들에 맞서 싸웠고, 그의 활동은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자를 위한 모든 저항을 총칼로 탄압하는 자들에 대한 정당한 외침이었다.

타이 단체들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 노동,

사회운동 단체들은 지금까지 소뭇 석방과 왕실모독죄 폐지를 위한 운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도 노동자연대다함께,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등의 단체들은 곧바로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연대 행동을 건설하고 있다. 규탄성명 전문은 〈레프트21〉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최용찬



2012년 6월 21일 타이 대사관 앞 ‘타이 노동운동가 소뭇 씨 석방과 타이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 인터뷰

“세계 자본주의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이 체제의 위기가 더 심각해지기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마이클 로버츠는 2008년 경제 위기와 1930년대 공황을 견주어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을 썼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http://thenextrecession.wordpress.com>)에 최근 경제 상황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하고 논평하는 글을 꾸준히 게재하고 있다.

최근 미국 민주당·공화당의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예산 합의는 무엇을 보여 줬나요?

이번 합의는 자본의 전락가들이 자본가들의 이윤을 늘리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른바 ‘재정 절벽’이라는 그림의 절반일 뿐이에요.

다른 절반은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 지출 중 — 복지 서비스와 복지수당을 포함해 —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삭감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정부 지출이 삭감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요. 공화당은 국방비는 감축하지 않고, 대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같은 폐쇄적인 미국 복지제도의 핵심 부문을 대폭 줄이려 합니다.

민주당 또한 의료, 교육, 운송 같은 정부 서비스를 줄이고 싶어 해요. 이런 분야들은 이미 줄일 대로 줄여서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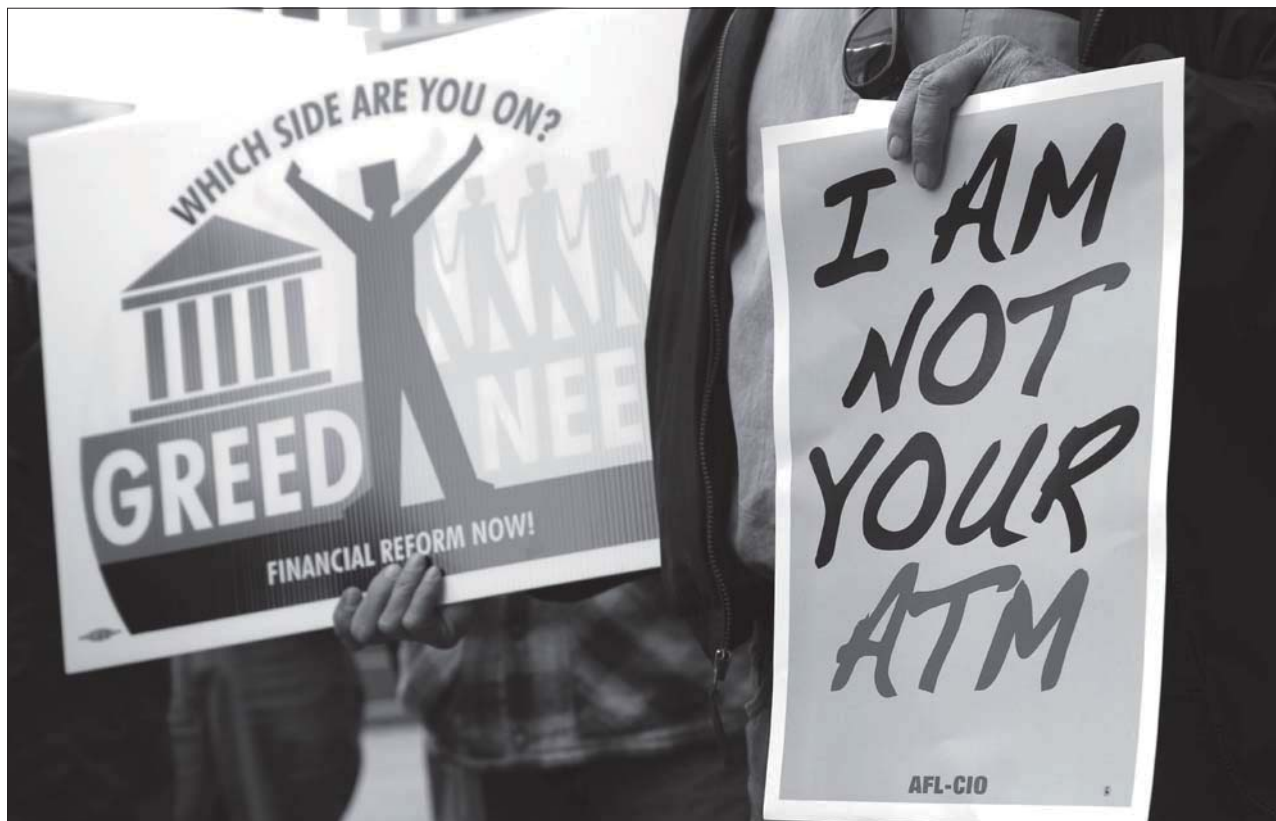
자본의 전락가들은 큰 정부와 복지 예산이 이윤율에 부담을 준다고 옹계 봤어요. 이것은 사장들에게 세금과 이자율 부담을 높입니다.

정부 부채와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난다면, 자본가들의 이윤을 잠식합니다. 그 전에 투자자들이 겁에 질릴 것이고, 이자율을 높이지 않으면 미국 국채를 사지 않으려 하겠죠. 그러면 정부 부채를 갚는데 돈이 더 들게 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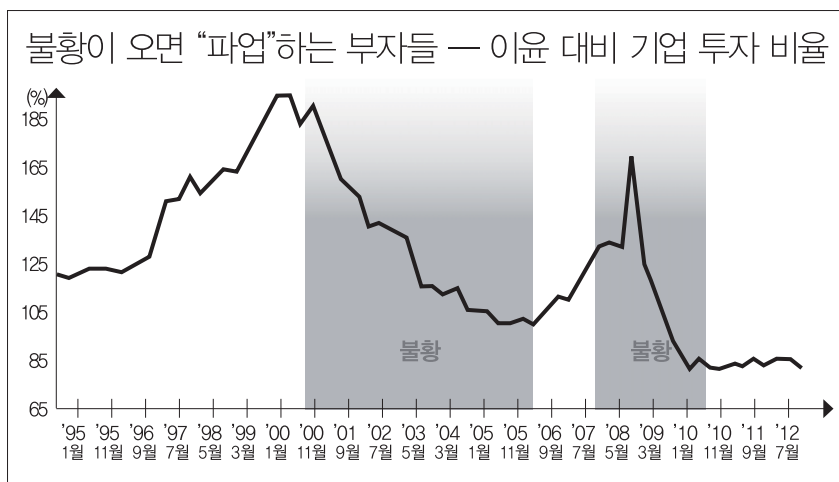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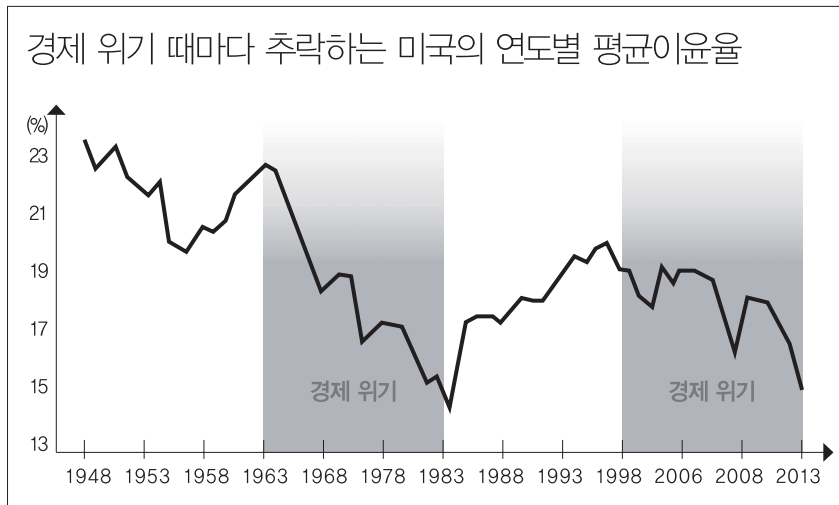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서 위기가 찾아온 것을 봤어요. 미국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위기를 대하는 미국의 대응은 유럽과 어떻게 다른가요? 그 차이는 어떤 효과를 낳을까요?

지금까지는, 영국과 유럽 다른 나라들의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긴축 조치를 더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어요.



“우린 너희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 복지를 빼앗으려 든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왜 미국이 유럽보다 조금이나마 더 회복했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돼요. 하지만 일본은 회복하지 못했죠.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회복한 진정한 이유는, 자본의 이윤율이 유럽이나 일본보다 미국에서 더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약하긴 하지만 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잘 돼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거죠.

하지만 지금 의회는 긴축을 대폭 강화하려 하고 있어요. 영국과 다른 나라가 긴축으로 위기를 해결하려 한 것이 실패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말이에요.

미국의 이윤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국의 이윤율을 따져 보면, 2006년에 도달한 수준보다 한참 낮습니다. 2006년에는 지난번 정점을 찍었던 1997년보다도 낮았고, 1997년에는 그 전 정점이었던 1965년보다 낮았죠. 이윤율은 가끔 상승하는 속에서 전체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이윤율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실질적 형태의 자산이나 허구적 자산(부채) 모두에서, 수익을 못 내는 자본이 아직 너무 많기 때문이죠.

2012년에 임금을 삭감해서 전체 이윤

이 상승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전의 부채와 비생산적 자산 때문에 발생한 이윤을 하락 압력을 간신히 봉합했어요.

하지만 이 자본주의가 엉망으로 망친 것을 수습하느라 또 다른 위기가 올 거예요. 나는 미국의 이윤율이 2013년에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부자들이 점점 부유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위기’일 수가 있죠?

절대적 실소득, 자산, 불평등 정도를 가지고 따지면 미국의 부자들은 이보다 더 부유했던 적이 없죠. 다른 많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것은 부자들 개개인의 자산을 말하는 것이고, 꼭 자본 축적이나 생산 투자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요 경제부문에 대한 자본가들의 투자는 위기 이전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국민총생산 대비 투자율도 서서히 낮아져 왔어요. 특히 제조업을 비롯한 주요 생산적 부문에서 그렇죠.

자본가들은 ‘투자 파업’ 중이에요. 위기가 심각하고 여전히 끝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죠.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는 영국과 미국 자본주의가 1873년에서 1890년대 중반 사이와 1930년대 대공황 때 겪었던 것과 비슷한 장기불황에 빠져 있어요. 이것은 “통상적인” 경기 순환 수준이 아니에요.

현재 자본주의는 생산에서 저성장 혹은 무(無)성장 상태에 묶여 있어서 고용과 소득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없어요.

금융완화, 재정적 경기부양, 긴축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에 전혀 기능을 못할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려면 1880년대나 1980년대 초 같은 거대한 불황을 거쳐야 할 겁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모두 이 끔찍하고 비효율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조직하는 것을 참고 견딜 준비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에야 하는 말입니다.

노동계급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최선의 경우에도, 세대 전체에서 높은 실업률과 삶의 질 하락이 나타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전쟁, 반동적 성격의 사회 격변, 회복 불가능 수준의 환경 파괴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335호 / 번역 김인수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행진팀장 수배 5년

비리범들은 감옥으로, 김광일은 우리 품으로!

김태윤

이명박 5년이 끝나면서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사면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반면 2008년 촛불운동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의 행진팀장을 맡았던 김광일 동지는 5년째



수배생활을 보내고 있다.

2008년 촛불운동은 단지 광우병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대운하, 언론 장악 등에 맞선 투쟁이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촛불이 제기했던 문제와 우려들은 대부분 현실로 나타났다. 대운하는 4대강이란 이름으로 추진돼 대규모 환경재앙을 낳고 있으며, ‘미친 교육’ 정책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다. 언론 장악이 낳은 결과는 이번 대선 때 종편의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의료민영화는 여론의 압도적 반대에도 물밑에서 계속 추진 중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우병 쇠고기로 대표할 수 있는 한미FTA는 여전히 건재하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에 대해 보복하고 저항을 잠재우려고 수많은 촛불 시민들을 연행하고, 구속하고, 벌금을 물렸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했으며, 당시 문제가 된 야간 집회 금지 조

항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다. 검찰은 비열하게도 야간 집회 금지로 그들을 기소하기 어렵게 되자 일반교통방해 등의 다른 혐의들을 엮어서 탄압했다. 법원은 여론에 부담을 느껴 몇 년째 재판을 미루고 있다.

김광일 동지는 촛불 운동 기간 내내 거리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촛불의 요구들을 제기하고 조직하고 대변해 왔고, 이

명박 정부의 탄압이 거세지자 조계사에서 3개월간 농성을 진행했다. 당시 그와 함께했던 대책회의 지도부들은 모두 경찰에 잡혀갔다가 풀려나서 현재 무사히 활동하고 있다. 박원석 당시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현재 국회의원이 돼 있다.

그러나 김광일 동지는 아직도 이명박 정부의 최장기 정치 수배자의 생활을 이어나

가고 있다. 그의 가족은 정당한 제기가 탄압받은 데 대한 억울함, 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주변을 맴도는 경찰에 대한 공포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의 경험은 2008년 촛불의 요구들이 당시에도 옳았고 지금도 여전히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김광일 동지에 대한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김광일 동지 어머니 안명례 씨

“있는 사람들은 죄짓고도 빠져나가고, 내 아들은 죄 없이도 고생”

회사까지 경찰이 찾아오고, 어디 가서 나서면 아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나서지도 못하고, 어디 하소연도 제대로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건강까지 상하고 있어요.

아들이 교통방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

건] 정당한 집회였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특별사면이다 뭐다 해서 다 빠져나가는데, 아들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도 고생을 하고, 그 고통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잘 모를 거예요. 이산가족의 심정이 이런 건지 싶어요.

도와주시는 분들도 너무 고생하고,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하루빨리 억울한 수배가 해제돼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2월 13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삼성에 맞선 저항

학생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 들의 투쟁이 황창규의 교수 임용을 무산시키다



사진 출처: 반노조계 노동자들과의 건강과 양면이 단결임

“반노동, 반사회 경영 책임자 인정 못 한다” 1월 14일 서울대 본관 앞에서 열린 ‘황창규 초빙교수 임용 반대’ 기자회견.

서울대가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을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하려다 학생들과 직업병 피해자·유가족의 반발로 무산되는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황창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장, 메모리 사업부장, 반도체 총괄 사장으로 있었던 자다. 특히 그는 2007년 사망한 고(故) 황유미 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황창규는 반도체 메모리의 집적도가 1년에 2배씩 증가한다는 이른바 ‘황의 법칙’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을 살인적인 속도 경쟁으로 내몰아 뺨갈 빠지게 했다는 얘기가 다름 없다.

그러나 황창규의 서울대 교수 임용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유가족 등에겐 피가 거꾸로 솟는 치명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다. 삼성의 반노동·반인권적 행태에 반대하던 진보적 학생들도 그를 인정할 수 없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산업재해노동자들과 소통하는 학생들의 모임’과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사회학과 학생·대학원생·졸업생 등은 황창규의 교수 임용에 반발해 즉각 성명을 내고 대책위를 꾸리는 등 반대 운동을 진행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와 유가족 들도 학교 측에 면담을 요청하고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단호한 투쟁에 밀린 학교 당국은 교수 임용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6년

한편, 최근 삼성 측이 직업병 피해자·유가족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해 왔다. 이것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굴하지 않고 싸워 온 투쟁의 성과다.

꽃다운 22세의 딸을 잃은 고(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이렇게 말했다.

“삼성은 지금껏 유미의 병이 개인 질병이며, 우리를 ‘돈 받아 먹으려는 파렴치한’이라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지난 6년간 버티던 삼성 측은 여론이 따라워 대화 제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삼성 측이 과연 진지하게 대화에 임할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삼성 측은 지금껏 백혈병 피해자들에게 산재 신청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회유·협박해 왔다. 특히, 삼성 측은 지금 백혈병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대화 시늉을 하며 소송 중단을 압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번 대화 제의는 삼성에서 발생한 모든 직업병 피해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충분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더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등 실질적 예방 대책을 내놔야 한다.

박소연

홍익대 경비·청소 노동자

단호한 점거 투쟁으로 또 거머쥔 승리

홍익대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점거 투쟁을 해 악질 용역업체를 무릎 꿇리고 교섭을 쟁취했다.

악덕업체 ‘용진실업’이 쫓겨난 뒤 새로 들어온 ‘국제공신’은 민주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며 옛 악덕업체의 행태를 되풀이했다.

폭로된 국제공신의 문서에는 조합원 성향, 해고 대상 조합원 명단 등 노조 파괴 시나리오도 담겨 있었다. 국제공신이 용진실업과 긴밀히 접촉해 온 것도 드러났다.

이에 노동자들은 교섭과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미 이 노동자들은 지난해 용진실업을 퇴출시킨 저력을 갖고 있다.

2011년 홍익대의 용역회사 용진실업은 민주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홍익대 경비회’라는 친사측 노조를 만들었고, 민주노조를 교섭에서 배제했다. 그 결과 홍익대 경비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에 속한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의 경비 노동자들보다 연 2백만 원가량 낮은 임금을 받았다. 이에 분노한 홍익대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직종을 뛰어넘는 단결 투쟁으로 이런 용진실업을 쫓아냈다.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단결해 싸움을 시작했다. 1월 23일,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곧바로 사무처를 항의 방문해 그 자리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찬

바닥에 앉아 ‘원청 사용자인 학교 당국이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총무팀장은 “국제공신 가서 얘기하지 왜 여기서 이러냐”며 오리발로 일관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근로감독관도 “왜 불법적으로 이곳을 점거하고 있느냐”며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한 노동자는 “일산에서 노동부 간부가 이마트 사측의 돈 받았잖아요?” 하며 “불법” 운운하는 근로감독관에 일침을 댔다.

다른 한 청소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업체가 우리 청소 쪽에도 스파이를 심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어용노조를 만들려고 했어요. 경비 노동자들이 물러나면 그 다음은 우리예요.” 이날 모인 1백70여 명 가운데 1백여 명이 청소노동자였다.

결국 국제공신 측은 8시간 만에 협상을 약속해야만 했다. 다음날 협상장에 나온 국제공신 사장은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이날 하루 동안 사실상 파업을 하면서 진짜 사장인 학교 측을 직접 압박해 승리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단결이 큰 힘을 발휘했다.

이번 승리는 곧 있을 임금·단체협약 투쟁에도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유정



2012년

사측을 겁에 질리게 한 자라스런 여성 노동자들.

공무원노조

노조 탄압, 고통전가에 단결로 맞서자

1월 19일, 공무원 노동자 2천여 명이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노사관계 정상화 및 6대 과제 쟁취”를 결의했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은 지 벌써 3년이 넘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했고 공무원 1백37명을 해고했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 3권 인정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집회, 거리 농성, 단식, 삭발 투쟁을 해 왔다.

지난해 10월 20일 전국에서 공무원 노동자 5만여 명이 총회를 연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심재철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 지위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당선 후 공무원노조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되레 정부는 대선 직후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해고했고, ‘불법노조 사무실 제공’ 운운하며 노조 사무실 폐쇄 등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공격했다. 또 박근혜는 벌써부터 공무원이 “육아휴직 남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줄이려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으려 한다.

박태현 전교조 교사

5년 전 이명박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공무원 머슴론’ 등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중앙부처 통폐합, 정원 감축, 연금 개악을 추진한 바 있다. 박근혜도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무원 연금법을 개악하는 등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런 점을 고려해 노동자 단결로 맞서야 한다.

특히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공무원 이기주의’ 비판에 맞서며, 박근혜의 모순을 폭로하고 단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둘째,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민주노총이 “5대 현안”에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과 노조 설립신고 요구안을 포함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박근혜가 공공부문을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뭉쳐야 한다. 당장 민영화 추진 시도에도 함께 싸워야 한다. 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이 사학연금과 연동되는 만큼 전교조와도 함께해야 한다. 여러 사회단체들과 노동운동 단체들도 연대해 함께 싸워야 한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전교조

현장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자

박근혜 당선 후 교육과 관련된 흉흉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 직후 경찰은 학교폭력 생기부 기제를 반대한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일진 경보 학교’도 1백2곳이 지정됐다. <뉴데일리> 같은 우익 언론은 박근혜 정부에 ‘전교조 척결’을 주문하고 있다.

박근혜는 후보 시절 교원 평가, 성과급과 근무평정을 일원화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입법예고됐다. 이 법안으로 ‘5.16 군사 정변을 혁명으로 바꾸는 일’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임 서울 교육감 문용린은 천왕중학교와 우솔초등학교의 혁신학교 지정을 거부했다. 학생인권조례 수정 방침도 시사했다.

이런 행태들은 교육을 통제해서 사회분위기를 오른쪽으로 돌리려는 시도다.

그리고 대부분 경쟁과 통제 일변도의 교육에 반대해 온 전교조를 겨냥한 것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 이후 전교조 내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하는 동지들이 많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친재벌 신자유주의 강성 우파 정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운동의 침체기를 뜻하지는 않는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운동의 조직과 의식이, 투지가 아주 높지는 않아도, 전반적으로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시작된 박근혜의 말 바꾸기는 거듭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공동전선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명령이나 ‘종북’ 마녀사냥 등 우리 편을 이간질할 수 있는 정점에도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 지금

칠곡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철회하라

1월 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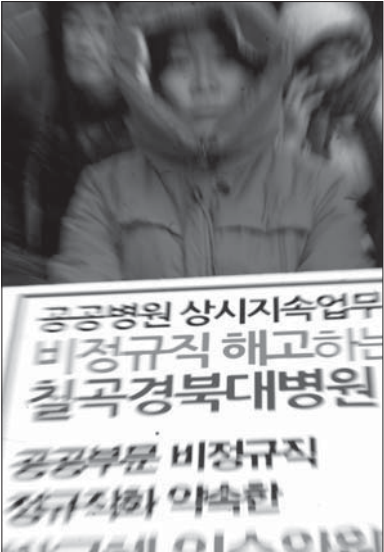
칠곡 경북대병원은 개원 당시 ‘정부가 정규직 정원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는다’며 진료 보조 업무 기능직을 외주화하려 했다. 그런데 노조가 이에 반대하자 일단 기능직을 임시직으로 채용한 후 추후 정부에게 정규직 정원을 확보해 이들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 측은 이런 약속을 완전히 무시했고, 최근엔 채용된 지 2년이 돼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 40명 중 6명을 해고했다.

병원 측은 “대구 본원의 환자 수가 줄어 일부 정규직 정원을 칠곡 본원으로 이동하려 한다”며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병원 측의 주장은 기만적이다. 실제로는 본원의 환자 수가 이미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원의 정규직 정원을 축소해 칠곡 본원으로 옮기면, 본원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해질 것이다. 본원에 비정규직도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칠곡 본원의 비정규직 해고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병원 측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망을 피하려고, 2년이 되자마자 이들을 해고했다. 2010년께 고용된 또 다른 노동자들도 고용 2년이 되는 오는 2~3월에 해고될 위험이 높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한 박근혜가 책임지고 고용 보장하라”

따라서 이번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칠곡 병원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원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다.

박근혜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립 경북대병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생을 살피겠다는 지배계급의 약속이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반갑게도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사태에 한결 같은 연대를 보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모범적이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자.

장태호

인천대 법인화

‘빚더미’ 법인에서 고통받는 학생·노동자

결국 국립법인 인천대학이 ‘빚더미 리, 빚더미’ 상태로 올해부터 출범한다. 올해 예산안에서 인천대가 요청했던 전락사업비 2백50억 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밀실합의로 전액 삭감됐다.

같은 규모의 국립대인 공주대가 정부에게 7백억 원을 지원받고 서울시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고 있는 이때에, 인천대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이자 9억 원만 풀랑 지원받는다. 박근혜의 측근인 인천 지역의원 황우여는 인천 아시안 게임을 명목으로 6백15억 원을 챙겼지만 인천대의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이다.

인천시와 학교 당국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천시와 인천대학 당국은 1월 17일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애초에 약속했던 9천4백32억 원 중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어려운 조건을 달아 지급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었다. 캠퍼스를 통합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부지도 여러가지 명분을 달아 가져오기 어렵게 했다.

학생들은 쉴 공간도 없는 좁은 캠퍼스에서 신입생을 맞이해야만 한다. 캠퍼스를 통합한 지 4년째인데도 송도 캠퍼스로 이전하지 못한 제물포 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차별은 해결될 실마

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립’이 됐는데도 등록금이 낮아지는커녕, 기존의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 수준에서 여전히 높은 편이다.

법인화로 인한 고통전가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학교 당국은 학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를 밀어붙이고 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 한 건물을 한 명이 청소하는 열악한 환경에 맞서 청소 노동자들이 제기한 인력 총원 요구에 고작 4명을 총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대는 준비도 없이 신설학과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정원은 점점 늘어나 이들의 노동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강화될 것이다.

정부와 시가 이토록 땀땀하게 재정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인천대가 국립대가 아니라 법인대학 즉, 사립대학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법인화는 안정적인 재정과 민주적인 학교, 교육의 공공성 중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

지난 1월 18일 ‘인천대 법인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학생들이 총장실 폐쇄 행동에 나섰다. 이날 비대위는 ‘대학 당국을 상대로 한 총장실 농성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인천대 모임도 이런 고통전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박한솔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인천대 모임

독자토론광장

2월 13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자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드라마 <학교 2013>를 보고

적나라하게 그려낸 학교의 현실

나는 교사다. 그래서 학원물 드라마를 의도적으로 피한다. 진짜 학교는 없고 재미있는 동아리 활동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청소년의 우정과 사랑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방송되는 <학교 2013>은 다르다. 어떤 장면들은 다소 과장돼 있고 어떤 장면에서는 학생의 인권보다 교사의 권위가 우선인 듯 보여 아쉽지만, 진짜 학교의 이야기가 있다. 학교와 사회가 규정한 틀과 낙인 때문에 어디로도 갈 수 없는 학생들이 있다.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돼 버린 학교에서 경쟁 때문에 친구들과 떨어진 과거의 내 이야기가 있다. 학교 관리자의 권위적인 횡포와 성적만을 중시하는 교육현장에서 무기력해지는 교사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낸다.

“성적 좀 올려 주세요, 새로운 수업 시도도 하지 마세요, 꿈이나 장래희망 따위 묻지 마세요.” 저런 학생들이 진짜 있겠냐고도 한다.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학교와

세상이 그렇게 말하도록 부추겼다. 몇 년 전 근무했던 학교 6학년 학생의 이야기다.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내 질문에 “한의사요, 돈도 많이 벌고 시간도 많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며 학원으로 내몰리는데 꿈이 뭔지 묻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 아닌가!

불편한

한 번 문제야는 영원한 문제이라고 찍어 버리는 학교와 사회를 드러내는 장면은 볼 때마다 불편했다. “학교가 날 처음부터 받아 주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면 기회가 줄 줄 알았어요.” 수업 중인 교실에 경찰이 들어와 보호관찰 중이라는 이유로 학생을 연행하는 장면까지. 이 드라마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단면들을 거침없이 때로는 과장해 보여 주면서 지금의 교육 체제가 학생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드라마 초반, 공문의 ‘끝 점’에 대한 에피소드는 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했을 것

이다. 내가 임용면접을 볼 때다. ‘업무와 잡무를 구분하시오.’ 이 문제를 두고 응시생들은 얼마나 고민했던가. 신규교사 연수에서 정답을 알았다. ‘잡무는 없다.’

얼마 전, 대구의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백년전쟁>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학교2013>에서도 수업 방식에 대해 학교장부터 학부모까지 교사를 쥐고 흔든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학교장의 태도는 어떤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능력이 부족한 교사라고 하고 계약해지 위협을 한다.

경쟁 때문에 망가져 가는 학교를 있는 그대로 보여 줘 불편한 <학교 2013>. 그러나 현실은 이보다 나은 조건이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지키며 공교육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불편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바꾸고자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김미연 서울당중초등학교 교사

야간 노동은 ‘발암 물질’임이 밝혀지다

최근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 집에서 돌연사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6년 만에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야간 노동은 ‘발암 물질’이라며 야간 노동을 없애라고 요구해 왔다.

그런데 실제로 야간 노동이 암 발병률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에서는 야간 노동이 유방암을 발병시킨다며 유방암에 걸린 여성에 대해 직업병을 인정한 바 있다. 국제암연구소가 야간 노동을 발암 의심 물질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야간 노동과 유방암 발병에 대해서만 의미 있는 연

관성이 인정된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 2012년 10월 미국 예방의학회지에 실린 ‘남성노동자에서 야간 노동과 암 위험’이라는 논문은 야간 노동이 유방암뿐 아니라 기타 다른 암의 발병률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위험 요인

이 논문을 보면, 야간 노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성이 현저히 높았다. 특히 전립선 암에 걸릴 위

험이 2.77배, 비호지킨림프종에 걸릴 위험은 2.31배, 췌장암은 2.27배, 직장암은 2.09배, 대장암은 2.03배, 폐암에 걸릴 위험은 1.76배, 방광암에 걸릴 위험은 1.74배가 높았다. 이는 각각의 암 별로 흡연, 비만, 음주 등의 가능한 위험 요인을 모두 보정하고도 남은 위험도다.

지금껏 수많은 노동자들이 요구한 ‘야간 노동 철폐’는 노동자의 삶의 질 문제뿐 아니라 가장 기본권인 건강권의 측면에서도 완전히 올바른 주장이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박소연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경기지회

재앙의 질주, KTX명영화

— 왜 반대해야 하고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연사 : 박실 (KTX명영화 : 재앙의 신호탄 — 정치적 분석과 투쟁 방향) 공동 저자, <레프트21> 기자)

일시 : 1월 31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회의실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도보 10분, 매탄동주민센터 옆 골든프라자 5층)

참가비 : 2천 원 (학생 1천 원) / 문의 : 010-8700-4647

서울 중북부지구

세계경제 위기, 동아시아 긴장 고조, 사회양극화 심화 ...

박근혜의 앞날과 진보진영의 과제

연사 :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일시 : 1월 31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한성대 에듀센터 804호(해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OGV 옆 건물)

참가비 : 2천 원 / 문의 : 010-9820-5698

서울 동부지구

일촉즉발의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연사 : 김어진 (반전평화연대(준) 공동 간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일시 : 1월 31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건대입구역 6번 출구) 3층 2강의실

참가비 : 3천5백 원 (학생 2천5백 원) / 문의 : 010-9453-5318

서울 남부지구

평화헌법 개정 · 집단자위권 도입 · 재무장 시도

— 아베의 일본은 어디로?

연사 : 이현주 (<레프트21> 기자)

일시 : 2월 7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L&B부동산경제연구소 강의장

(교대역 1번/13번 출구 2백 미터 농부의 아들 2층)

참가비 : 4천 원 (학생 3천 원) / 문의 : 010-9401-1370



2012년 8월 31일 민주노총 파업 승리 결의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요금 인상, 대형참사, 인력 감축의 재앙을 부를

KTX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정부가 철도 민영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관제권 환수를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치로, 법적 절차만 보면 2월 19일 이후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언제든 통과될 수 있다.

급기야 1월 16일 <한겨레>는 "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것이 시행된다면, KTX 민영화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임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정부가 이런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박근혜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심산이다. 새 정부 출범 전에 KTX 민영화에 '대못'을 박아 두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깊어지는 세계경제 위기와 관련 깊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무엇보다 경쟁과 효율의 시장 논리를 강화하려 한다. 민영화는 공기업·사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는 지렛대 구실을 할 것이다.

게다가 민영화는 1퍼센트 재벌·기업

주들에게 온갖 특혜와 수익을 보장해 주려는 조치다. 철도의 알짜배기 노선인 수서발 KTX를 사기업에 넘겨 주고, 수요가 증대하는 전력 산업에 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료·물·가스 등도 모두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만들어 내다 팔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영화는 99퍼센트 노동자·민중에게 요금 인상, 대형 참사, 공



철도는 공공재다 철도 운영을 수익성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

공서비스 후퇴, 인력 감축 등 끔찍한 고통만 안겨줄 것이다.

해외의 철도 민영화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영국 철도 민영화는 막대한 요금 인상과 많은 인명을 앗아간 대형 사고로 악명 높다. 최근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를 보면, 리버풀에 사는 노동자가 철도를 이용해 맨체스터로 출퇴근하는 비용은 1년에 4백80여만 원이나 된다. 비슷한 거리의 서울역과 수원역 사이를 오가는 비용이 1년에 80여만 원 정도인데 말이다.

국토부가 최근 모범으로 내세우는 일본에서도 민영화는 재앙의 길이었다. 2005년 탈선 사고로 1백7명이 죽고 4백50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고, 노동자 7만 7천여 명이 대량 해고되는 비극도 벌어졌다.

대형 참사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철도 민영화가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영업적자가 1조 3천억 원"이나 된다며 민영화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정부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보조금만 다 지급했어도 적자폭은 대폭 줄었을 것이다. 더구나 막대한 선로 사용료를 부과하지만 않았어도 부채가 이렇게 불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철도는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재다. 따라서 선로망을 깔고, 역사를 짓고, 차량을 확보하고, 유지·보수하는 등의 모든 일들은 정부 책임이다. 누구나 싼값에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도 대폭 낮춰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에게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요컨대, 철도 운영에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틀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시작으로, 전기·가스·의료·은행·물·공항 등 공공부문 전역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최근에도 지식경제부는 2020년까지 1천74만 킬로와트의 석탄 발전소를 더 지어, 여기에 사기업들을 대거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15.8퍼센트를 차지하는 민간 화력발전 용량을 무려 74.4퍼센트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과 대규모 환경 파괴를 예고하

는 재앙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것은 2000년대 초 은행 민영화 과정이 그랬듯이,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금융서비스 악화를 낳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 10여 년간 민영화 반대 목소리는 점차 커졌고,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거듭 가로막혔다. 이명박 정부도 집권 초기부터 민영화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2008년 촛불항쟁 같은 광범한 반대와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거듭 좌절을 겪었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이 단결해 저항한다면, 민영화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들과 진보 정당들, 광범한 진보진영이 힘을 모아 대응한다면, 충분히 정부의 계획을 좌초시킬 수 있다.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을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민영화 정책 일반에 맞서는 연대체를 구축하자. 특히, 지역과 대학 등 곳곳에서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확대하고, 기초 조직을 결성해 운동의 저변을 넓혀 나가자.

박설

▶ 관련기사 11면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민영화와 거리를 뒀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2일 당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박 당선인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최근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정책질문에 답하면서도 박근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 민영화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

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KTX 민영화 강행에 대해 박근혜는 침묵하고 있다. 사실상 국토부가 박근혜의 숙내를 읽고 철도관제권 회수 등 민영화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침묵

사실 박근혜는 오래전부터 민영화를 지지해 왔다. 2005년에는 "현 정부(당시 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

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선 운동 중에도 박근혜는 민영화에 대한 본심을 완전히 숨길 수 없었다. 의료 민영화의 발판을 놓는 이명박의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고, 전력과 가스도 "독점 구조 때문에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있다면서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설한 수급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과 우파를 대변하는 정치인답게 의료, 전기, 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 의도

를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는 민영화로 재벌들에게 수익성 있는 사업을 보장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여 나가려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 부문 구조조정 드라이브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다.

선거 전후로 여론을 의식해 본색을 숨겼던 박근혜는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의 발판을 닦는 것을 뒤에서 은근히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성지현

이렇게 합시다

- ▶ 대통령직인수위 웹사이트 '국민행복제안센터'에 민영화 반대 의견을 남깁시다. (<http://www.korea2013.kr/propose/auth.php>)
- ▶ 국토부에 항의 전화 하고, 항의 팩스를 보냅니다. (국토부 철도정책과 전화 : 02-201-3940/3944, 팩스 : 02-201-5594)
- ▶ SNS에 민영화 반대 메시지를 퍼나릅니다.
- ▶ 자신이 속한 노조·단체·학생회·동아리 등에 제안해 민영화에 반대하는 다양한 행동을 건설합니다. (KTX민영화저지범대위 홍보물이 필요한 분은 02-797-1126(철도노조)로 연락하세요, <레프트21>과 노동자연대합께가 공동 제작한 홍보물은 www.alltogether.or.kr의 '캠페인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